

1장 서구의 근대화 과정 및 그 쟁점

<<내용요약>>

1. 근대화의 개념

근대적인 기술과 지식을 통해 사회의 구조 및 역학관계(특권집단들)를 변화시키고 재조직하여 제반 사회 조건과 관계를 바꾸는 과정 - 산업화, 민주화, 세속화 등의 다양한 의미 내포(합리화, 서구화의 의미)

- ① 정치적 의미: 국민국가 형성(통합된 영토와 주권에 입각하여 대내외적 정당성 확보)
- ② 경제적 의미: 자본주의적 체제의 수립(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
- ③ 사회적 국면: 사회적, 성적 분업 및 차별화된 사회구조의 성립(계급과 젠더, 가부장주의, 가족 등이 중요 개념으로 등장 - 오늘날까지도 중요 사회적 범주로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 지속)

④ 문화적 측면

가. 세속화, 개별화, 합리화(서구 근대 산업 문명의 전개 추세)

나. 집단별 결속의 토대가 될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

다. 엘리트 문화의 민중 문화 사이의 단절 심화

- 르네상스: 고대문화에 대한 분석 중심의 엘리트 문화로 구전 중심의 민중 문화와의 단절을 증대시키는 계기
- 종교개혁으로 강화된 세속군주의 공권력 및 국가와 결합한 기독교 문화의 정립: 이교문화와 국가권력의 틀에 편입되지 않은 관습 등을 규제하면서 민중 통제
- 프랑스 혁명: 세속화의 급진진, 새로운 정서와 가치의 추구, 엘리트의 민중 통제 치밀화
- 산업화에 따른 노동 통제: 민중의 관행을 더욱 위축시킴.

2. 근대화 시점: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된 18세기 말을 출발점으로 설정

3. 전파와 변형: 서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양상과 불균등한 과정으로 진행

4. 근대화의 국제적 측면

① 서구의 근대화 및 지리적 팽창의 조건이 내부적으로만 충족된 것은 아니다

- 서구는 비서구 사회에 부담 전가(탐험과 정복, 식민화 및 자본주의적 팽창과 제국주의적 침투)

- 오늘날 거의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는 독립되고 탈식민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구에 의존

② 제반 이론과 논쟁 초래

가. 문명 충돌론: 서구와 비서구사회들의 관계를 문화적 차이로 파악 - 문명권 사이의 긴장과 충돌 강조(현재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 스스로 대변한다고 믿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 입각한 전망)

나. 문화적 제국주의: 서구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의 자원을 약탈하는 동시에 비서구지역을 타자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와 민족을 '타자'로 지칭.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해 비서구인들의 정체성 왜곡

다.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각각의 기반과 개성이 다른 문화들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또한 각 문화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인

간의 지적·물적 경험과 인식의 세계를 넓히고 지구 문화를 풍부하게 하자는 입장 - 탈식민지인들도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반성과 성찰, 그리고 결단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5. 근대화를 둘러싼 제반 논쟁

- ① 근대화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 근대화와 서구화를 일치시키는 시각, 비서구 및 진보 지식인으로부터 비판받는 이론
- ② 종속이론: 제 3세계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중심-주변의 전 세계적 잉여 수탈구조 인식, ‘탈종속’, 더 나아가 ‘혁명’을 통해 제 3세계의 발전 모색
- ③ 세계체제론: 월러스틴을 비롯한 세계체제론자들의 이론
 - ‘세계체제’라는 개념으로 근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 기술과 자본의 우위를 점한 중심부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주변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 ‘세계화’ 또한 이런 맥락에서 파악.
- ④ 탈근대주의: 서구에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이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민주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제했지만 지나친 물질주의와 엘리트주의, 그리고 국제적인 착취를 초래한 것에 대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움직임, 최근 NGO 운동으로 이어짐.

6. 근대화의 문제와 전망

서구중심적인 관점에서의 탈피

다원적 관점에서의 조망: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문화 및 국제 관계 등의 요소 고려

풍부한 지식과 견문,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 도덕적인 성찰, 새로운 국제 정치 이론과 세계 전략 마련의 필요성

<<용어정리>>

○ **근대화**: 근대 기술과 지식을 통해 사회의 특권 집단들을 변화시키고 재조직하여 사회 조건과 관계를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화, 민주화, 세속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보통 이중 혁명이 시작된 18세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국민국가의 형성,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 성적 분업 및 차별화된 사회구조의 성립을 의미한다.

○ **근대국가**: 16세기 이래 서구에서부터 확립되기 시작해 19~20세기에 보편화된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관료제를 갖추고 민족적 동질성과 주권 형성 등을 조건으로 삼는다. 특히 주권, 즉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만큼 중요했다. 근대 국가는 대내적 구조와 대외적 관계 및 경쟁의 성패를 통해 국민의 충성심 및 물자를 얻어 성장했다.

○ **산업화**: 생산의 분업과 기계화로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농업에 근간하고 있던 봉건사회의 토지 소유와 이에 따른 사회 구조가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로 대체 되었다.

○ **자본주의**: 르네상스 무렵부터 시작되었으나 18세기에 본격화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 체제 및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형성과 운동이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며, 상업 및 시장의 확대, 노동 분업, 상품의 광범위한 생산 및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자유방임과 사적 경제를 통해 생산이 촉진되어 물질적인 부가 증대되었지만, 소외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 역시 증대되었다.

○ **부르주아지**: 근대화를 이끈 사회 지도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일컬으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장과 은행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이 근대화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 **계급**: 자본주의 사회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지속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범주이기도 하다. 사회 지도력이 어떤 계급 구성을 갖는지에 따라 근대화 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 **젠더**: 계급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 관계, 특히 불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범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차에 근거한다. 근대화 이전 시대에도 남녀간의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산업 사회가 공, 사 영역의 분리를 강화하면서 젠더 불평등에 의한 남성 지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 **식민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서구 지역에 행해진 광범위한 정복과 지배 정책.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유럽의 팽창은 유럽이 신세계를 ‘발명’한 뒤, 이를 정치, 경제적으로 정복, 편입하는 식민화를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은 정치, 경제적으로 서구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문화적 정체성도 왜곡당했다.

○ **제국주의**: 서구가 비서구 지역을 정치, 군사적으로 직접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정책. 유럽 중심적이던 기존의 설명과 달리 근대화를 위한 조건이 서구 안에서 충족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자본주의적 팽창과 제국주의적인 침투를 시도해 비유럽 지역으로부터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여 근대화를 완성했다.

○ **문명 충돌론**: 서구와 타자, 즉 비서구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이론 중 하나.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 종식 이후, 이데올로기나 빈부 등 비교적 단순한 갈등구조에서 다문명 세계라는 복잡한 갈등구조가 나타났다고 주창한다. 크게 8개의 문명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특히 서구와 비서구 사회로 구분되며, 문명권 사이의 상이성이 이들을 충돌하고 대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주로 서구를 대변한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론이다.

○ **문화적 제국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공한 유럽 문명을 기준으로 다른 문명과 문화권이 타자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구는 자신을 중심으로 문화적 위계의 체계를 만들어 타 문화에 침투시켰으며, 이에 따라 후진적인 문화로 가치 절하된 비서구 세계는 정체성을 왜곡 당했다는 지적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19세기 이래 서구 주도의 역사를 제국주의의 역사로 파악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에 근간한 교류를 통해 서구 중심적 문화적 담론에서 제3세계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 **탈근대주의**: 1960년대 이후 근대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사조로서, 폭력성과 억압이 근대화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화의 사상적 저변인 계몽주의가 보편적인 이성 과 진보를 믿는데 비해, 탈근대주의론자들은 이를 현실성 없는 거대 사변이자 백인 중산층 남성중심주의의 산물로 본다.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여성을 비롯하여 근대화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온 다양한 정체성들이 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서구의 각 국가에서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비교해 보자.

근대화란 근대 기술과 지식을 통해 사회의 특권 집단들을 변화시키고 재조직하여 사회 조건과 관계를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화, 민주화, 세속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보통 이중 혁명이 시작된 18세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국민국가의 형성,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 성적 분업 및 차별화된 사회구조의 성립을 의미한다.

근대화는 지역, 국가별로 양상이 다양했다. 최초로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서구 역시 국가마다 상이한 경로를 밟아 근대화를 달성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로의 도약을 이루어냈으며,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의 준거를 제시했던 것이다.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의 경우,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이었던 정부가 근대국가의 건설과 산업화를 주도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는 분위기 안에서 시민 사회는 허약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목표는 자유주의 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팽창이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파시즘의 대두로 귀결되었다.

양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열강으로 대두한 미국과 러시아는 근대화 과정에서 상이한 과정을 밟았다.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던 미국은 자유주의적 풍토 안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보수적인 체제를 성립시켰다. 남북전쟁을 거치며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은 이후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주요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제정의 강력한 억압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대격변을 겪었다. 제정 시대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농업개혁과 산업화는 소련 수립 이후에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은 뒤늦은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안정적 발전을 이룩했다.

2.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계급과 성의 구분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자.

산업화는 봉건적 사회관계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인신적 예속을 특징으로 하는 신분 사회는 이제 법 앞에서는 서로 평등하지만 생산관계에 의해 차별받는 계급 사회로 바뀌었다. 사회 지도력의 형태는 근대화 과정에 결정적인 효과를 가하는 요소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양대 계급 중 부르주아지는 근대화에서 가장 주된 행위자였다. 기존의 지배세력이었던 귀족과 새로이 부상한 부르주아지, 그리고 부르주아지와 그 지배에 도전하는 프롤레타리아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각 국가의 근대화 과정은 서로 다른 양상을 취했다.

부르주아지조차 주도권을 쥐지 못한 국가들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적 목표를 대부분 성취한 국가들에서도 계급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 대다수의 인구는 자본주의적인 소유권, 이윤의 지상성, 노동자들의 세력 부재라는 기반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전근대적이거나 심지어는 전 문명화된 사회·문화적 형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1950년경에 이르러까지 유럽은 엄격한 계급사회였으며 계급 사이의 소통도 미비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계급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젠더 불평등도 양상을 일부 달리하면서 심화되었다. 산업자본주의는 성별 노동 분업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젠더와 계급은 서로 교차하며 불평등을 강화했다.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젠더불평등은 근대 이후 공사영역의 엄격한 분리 의해 새로운 외양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1차 대전 시기에 여성 노동력이 대거 동원되었던 경험도 젠더불평등의 극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정은 끊임없이 여성을 구속하는 제도였다.

현대사회에서도 젠더와 계급에 의한 차별은 사회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체제비판적인 움직임은 자유와 권리, 평등이라는 제반 개념들을 성취하고 증진시켜야 할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과 여

권운동 등 많은 저항의 시도는 서양 근대의 면모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3.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지리적 팽창 과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의해 보자.

서구의 근대화 과정은 지리적 팽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구의 근대화를 설명해왔던 기존의 유럽중심주의적 논리와는 달리, 사실 유럽의 근대화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럽은 근대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은 유럽이 부과한 식민주의, 제국주의 정책을 감당해야 했다. 이 결과, 제 3세계 국가들은 지금도 서구에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450년경부터 시작된 유럽 팽창은 다섯 단계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럽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팽창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럽이 비 서구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유럽적 자본주의는 전 지구적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양차대전 시기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독립한 구 식민지들이 여전히 유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시기이다. 각 단계는 유럽의 지리적 팽창을 경제적 근대화의 전개과정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근대화론, 종속이론 및 세계체제론, 탈근대주의 등 다양하다. 이 중 서구학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의거해 제시한 이론이 근대화론이다. 이 이론은 서구식 근대화를 유일한 표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풍요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대화론은 일단 서구 외의 사회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다,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속이론은 근대화론의 단계론적이고 일직선적 발전론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심-주변의 잉여수탈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주변부인 제3세계는 근대화되면 될 수록 중심부에 종속될 뿐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민주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제3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탈종속, 심지어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종속 이론가들의 결론이었다. 종속 이론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장 동양(동아시아)의 근대화

<<내용 요약>>

1. 근대 직전의 동양 다시보기

- ① 동양의 대항해시대와 무역붐: 152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체제와 무역에 엄청난 변화 발생
 - 배경: 당시 세계의 무역 결제 수단이었던 은이 일본에서 대량 산출 - 일본산 은은 아메리카산 은과 더불어 동아시아에 유입되어 무역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
 - 곳곳에서 조공 무역 체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역들이 행해짐: 은 생산을 통해 막대한 구

매력을 획득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비단과 차를 수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 왜구, 중국 남부 해상 지역의 정씨 부자 세력,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 동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변화

- 당시 북방과 만주지역의 무역을 주도했던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1588년)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1590년)
-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동아시아의 무역 붐을 타고 성장한 신흥 세력들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군사적 도전
- 17세기 말에 청, 조선, 도쿠가와 막부(막부)의 성립: 이후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체제

2. 동양, 세계경제의 중심

기존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적어도 산업혁명전까지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경제적 수준이 동시대 유럽보다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는 측면도 있었다는 주장

① 선진적인 중국경제: 18세기 중국 양쯔강 하류지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농촌 수공업과 상업은 바탕으로 한 무역 흑자, 19세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세계 경제의 중심의 자리 차지

② 중국기술의 주변지역으로의 이전: 견직, 조선, 제당 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선진성의 전파

③ 근세일본의 경제적 성장: 경지 확대와 정농주의를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를 기반으로 생사, 면화, 차 생산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정도에 이르렀다.

3. 동양에서 근대의 전개: 중국적 세계질서(중화체제)의 동요와 해체

① 아편전쟁과 서양의 충격: 1820년 이후 중국에서 은의 유출 - 당시 유럽 산업의 높은 성장률, 중국 은이 다시 유럽으로 역류되는 현상, 영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 청은 다시 애로호 사건으로 서양 열강과 전쟁을 벌였으나 역시 패배

② 청의 근대화 노력, 양무운동: 서양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육성하기 위해 양무운동을 전개했으나 근본적인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③ 청일전쟁과 중국적 세계질서의 종말

- 중국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실패 입증
- 일본의 승리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큰 변화 초래: 조선은 청의 권위 부정

④ 청불전쟁에서의 중국의 패배: 베트남은 청의 지배에서 이탈

4. 동양의 근대화와 일본

① 중화체제에 대한 일본의 도전

중화 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 장악 -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정부 최대의 외교 과제로 설정 - 아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조선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 강요, 타이완에 군대 파견) - 1880년대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으로 유럽의 일원이 되려는 움직임 가세

② 일본근대화의 성공요인: 사무라이 층의 적극적인 개혁 운동 참여 및 군사적 감각, 바쿠후나 한의 경쟁적인 정보수집, 서양 열강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 등

③ 동양의 근대화와 일본의 충격: 근대화 성공을 바탕으로 조선 등 침략

5. 근대동아시아의 경제

①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의 농촌 공업과 상업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서양의 공세 속에서도 존속 - 중국의 대규모 기계제 공업의 계속 성장.

②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권 성장에 기여: 19세기 후반 방직업 및 방직업의 성장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동아시아 각국에 소비재를 대량으로 공급·유통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권 성장에 기여

③ 일본의 패망: 군사력을 동원한 엔 블록 경제권 모색 중 결국 패망

<<용어정리>>

○ **은 유통:** 근대 이전 세계 무역의 결제 수단은 대부분 은이었으며, 따라서 당시 은 유통은 화폐의 이동 내지 무역의 움직임과 일치했다. 1520년대 이후 중국의 회취법을 도입한 일본의 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동아시아의 무역량이 치솟았다. 아메리카의 은을 앞세운 서구 세력과 함께 왜구 등 기존 조공 체제의 바깥에서 무역활동을 증대시킨 해상세력의 등장은 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정치적 격변으로 확장되어 청 제국과 도쿠가와 바쿠후의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대항해:** 세계 문명의 후진 지역이던 유럽은 신대륙의 ‘발견’을 전후해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었다. 선두에 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를 향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특히 포르투갈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말라카 왕국을 점령했고, 동아시아의 무역 붐에 뛰어 들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마닐라를 건설했고, 네덜란드는 타이완과 인도네시아의 자바를 거점으로 삼았다.

○ **무역 붐과 동아시아의 재편:** 은 유통의 확대에 의해 동아시아 무역 붐이 일어나고, 조공 무역 체제가 흔들리자 명나라와 무로마치 바쿠후는 각각 유명무실해진 민간 무역 금지와 감함무역을 폐지했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무역 붐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만주지역의 교역을 통해 성장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유럽과의 무역에서 얻은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력을 확장했다. 후금과 일본은 조선 침략을 통해 기존 동아시아 질서에 도전했고, 세 차례의 전쟁 이후 명을 누른 청제국과 전국시대를 끝낸 도쿠가와 바쿠후가 성립했다.

○ **유럽 중심주의:** 유럽이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제패하면서 국제 무역에서도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를 구축해왔다는 시각은 최근 들어 유럽 중심주의로 비판받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산업혁명 전까지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준이 동시대 유럽에 비해 앞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 역사가들이 19세기 말 이후 전개된 서세동점을 이전 역사에 소급 적용해왔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 **기술 이전:** 근세 동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로, 청의 선진 기술이 주변 지역으로 서서히 전파되어간 현상. 동아시아의 16~17세기 교역 붐을 통한 상호교류 확산과 더불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인한 인적 이동이 매개가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화교 사회, 타이완 한인 사회 및 명나라 유민의 이동과 임진왜란 시기의 조선인 포로 등이 인적 이동으로 인한 기술 이전의 대표적 사례이다. 동남아시아의 비단 제조업이나 조선업이 기술 이전을 통해 성립했다.

○ **정농주의:** 일본의 농업생산량 급증을 가능하게 한 농업 조직 방식으로, 노동집약적 농업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 17세기 이후 일본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의 상승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는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개간을 통한 경지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이 방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노동 투입 증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행해졌다. 효율적인 농법과 농구 개량, 비료 사용 등 농업기술의 전반적 개발이 필요했으며, 소농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근면 혁명이 이를 가능케 했다.

○ **아편 전쟁:** 무역을 둘러싼 중국과 영국의 마찰은 결국 제1차 중영전쟁(1840-1842), 즉 아편전쟁을 불러왔다. 이 전쟁은 영국에 홍콩 할양, 5개항 개항, 배상금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징조약의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이미 1820년대부터 은의 순수출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청의 위상은 아편전쟁의 패배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일본은 아편전쟁의 패배가 서양의 군사적 우위를 증명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 **양무운동:** 중영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을 계기로 서구의 기술과 교육에 주목한 청의 관리들은 1860년대 중반부터 부국강병을 위해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구했다. 군수 산업을 비롯한 근대적 산업의 발전, 신식 교육 기관 설립 등 광범위한 규모의 서구식 개혁을 도모했으나 청일전쟁 때에 운동이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전통적 경제 구조의 지속, 추진 세력의 지역적 한계, 부패와 비능률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양무운동의 실패 이후 변법론이 새로운 개혁의 방법론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 **중화 체제의 해체:**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양국이 충돌했다.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에게 각종 특혜를 인정하였다. 조공체제를 이루던 국가들 중 베트남을 비롯한 대부분을 상실한 청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조선을 잃으면서 중화체제의 해체를 목도하게 되었다

○ **이와쿠라 사절단:** 1871년, 메이지 정부가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으로 정부 주요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양 열강이 일본을 아직 근대화가 덜 된 국가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아 이와쿠라 사절단은 조약 개정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근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 **정한론:** 아시아에 군사적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공격적인 태도. 1876년 강화도조약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정한론이 구체화된 첫 번째 시도였다.

○ **주권선과 이익선:** 1890년 일본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국회 첫 연설에서 했던 발언. 이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주권선인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익에 관계되는 이익선인 한반도에까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본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조선에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 **일본 유학 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로 타국에 모범사례이자 경계대상이 되었다. 청과 조선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된 일본에게 충격을 받는 한편 구체화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을 통해 근대화의 사례를 배우고자 했다. 조선의 정부사절단 수신사를 필두로 조선, 중국, 베트남 등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지리적인 이점과 같은 문화권이라는 동질감이 이러한 유학 붐을 더욱 부추겼다.

○ **재래 산업과 기계제 공장:** 서양의 공업화 이전에 근세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가족 단위 농업 경영과 근면 혁명의 영향으로 농촌 공업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해 있었다. 이러한 재래 산업과 유통망은 동아시아 무역 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9세기에 서양의 공세를 맞이하고서도 많이 살아남았다. 서양의 영향을 받아 기계제 공업도 꾸준히 발전했다. 방적업과 방직업은 인도, 일본, 중국에서 기계제 공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 부문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산업화는 대규모 기계제 공업과 영세, 중소 공업이 공존하는 구조로 전개되었다.

<<생각해 볼 문제>>

1. ‘유럽중심주의사관’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유럽중심주의 사관은 지금까지 근대 역사에 대해, 유럽이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제패했고 국제 무역에서도 유럽중심의 세계체제를 구축해왔으며 타 지역에 대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서술해왔다. 이런 관점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경제성장과 정복에 따른 영향력 증대를 산업혁명 이전으로 소급 적용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산업혁명 전까지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미 18세기에 양자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수공업과 상업이 고도로 발달했고, 기술,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럽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GNP계산을 통해 1800년까지도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유럽 중심의 역사 서술이 산업 혁명 이전의 유럽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비판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근대 이후 조선의 전통 산업의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선시대의 공업은 주로 농촌의 자급자족을 위한 수공업에 머물렀다. 보다 전문적인 수공업자들은 주로 국가에 소속되어 지배 계급의 사치품을 생산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사적인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이 먼저 변화하기 시작했다. 상품유통을 전제로 하는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토지 소유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 개간과 매입을 통한 토지점병이 성행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소작농은 현물로 납부하던 지대를 점차 화폐로 납부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공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업은 조선 시대 내내 강력한 국가 통제하에 묶여 있다가, 후기에 들어서 개인의 개발이 허용되었다. 여기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도 있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 계층 역시 자본을 축적했다. 19세기 말 공인들은 어용물자를 조달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사상들은 공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공인권 을 사들이기도 했다.

개항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근대적 기계공업 생산품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면제품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수출은 주로 곡물과 금, 소가죽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과의 미면 교환 체제는 점차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선 내의 수공업 면포를 몰락하게 만들었다. 전문적인 수공업자 뿐 아니라 가내 생산하던 농민도 이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 갑오개혁을 통해 기존의 호조가 탁지아문, 탁지부로 개편되면서 은본위제와 세금 금납제, 도량형의 개정, 은행과 회사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2백여 조항의 근대적 경제로의 개혁 정책이 실행되었다. 이후 광무개혁 때에는 광산, 홍삼, 철도 수익을 황제가 장악했으며, 관료, 민간 자본가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해 기업, 은행을 세우고 근대식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개항장, 객주조합, 보부상, 시전상인들도 정부에 상납 및 납세를 통하여 비호를 받았다. 그러나 전통 산업의 활발한 부흥에는 미치지 못했다.

3장 영국의 근대화

<<내용 요약>>

1. 산업혁명의 원인:

① 정치적 안정(군주의 간섭을 견제하고 지주와 상공업 사이의 정치적 타협을 바탕으로 이윤활동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② 농업 부문의 변화 ③ 산업 노동력 확대 ④ 풍부한 석탄과 철 ⑤ 해외 진출에 따른 자극

2. 영국 산업화의 특징: 생산방식과 기술의 혁신 - 케이의 자동 복,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수력발전에 비해 입지조건이나 기 후에 구애받지 않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 제공)

3. 산업화가 가져온 변화:

① 산업의 중심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 인구의 대다수는 도시로 집중

② 일상적 생활양식의 변화: 노동 조건의 변화 - 노동자 자신의 통제력 상실/ 기계 및 기술의 도입과 숙련 노동자의 입지 악화/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 증대

4. 영국 산업화에 대한 평가:

① 긍정적 시각: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모델로 부각

② 비판적 시각: 영국의 사례가 생각보다 대단하거나 급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시각

③ 근대화 자체에 대한 비판 - 근본적 문제 제기(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진보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는가?)

5. 국민정체성의 형성:

① 근대성을 측정하는 지표 - 한 나라, 한 국민이라는 의식의 형성 여부 및 정도

② 18세기 초부터 1815년 나폴레옹전쟁 사이 - 잉글랜드를 넘어서 대브리튼을 포괄하는 국민 정체성의 형성(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정치적 통합)

③ 종교, 전쟁, 제국 등의 요소 - 특히 제국으로서 행한 식민지 진출은 영국 근대 내셔널리즘의 결속 공고화

6. 타자의 산출: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는 비국민인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 - 외부 타자(식민지), 내부 타자(중간계급에 대비되는 노동계급, 근대 남성에게 대비되는 근대 여성)

7. 근대인의 폐쇄성과 배타성:

① 개념: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유산인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이상의 형상화

②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의 조건이 봉쇄된 여성들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개념 - 근대적 개인은 가족적,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남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은 처음부터 배제.

<<용어정리>>

○ **국민 정체성:** 근대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한 나라, 한 국민이라는 의식을 뜻한다. 국가나 국민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진 집단이 자신들을 하나라고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충성심과 일체감도 여러 계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일컬어진다.

○ **곡물법:** 곡물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곡물 수입을 금지해 곡물의 고가격을 유지하는 법. 영국 내의 지주층을 보호하는 법이었다.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운 상공업 층은 이 법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상공업에 기반을 둔 중간 계급

이 의회에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영국 자유무역주의의 실질적인 개막으로 일컬어진다.

○ **산업혁명:**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진행된 영국의 산업화를 가리킨다. 1881년 토인비가 강연에서 사용한 뒤 쓰이게 된 용어로, 가장 앞선 데다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혁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증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화석 연료의 사용 등을 바탕으로 방직 산업 부문에서 기계화가 시작된 뒤 산업 생산의 양상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이후 경제의 중심은 농업에서 산업으로 이동했고,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관계 역시 크게 바뀌었다.

○ **스피넘랜드 제도:** 1795년, 농한기에 농촌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빵 가격에 따른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는 노동력의 유연한 이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시 상공업 층의 원성을 샀다.

○ **식민지:** 제국주의적 진출을 통해 종속시킨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영국의 근대 내셔널리즘을 공고하게 만든 것은 식민지 진출이었다. 영국민 내부의 갈등은 식민지 진출을 통한 성취를 통해 무마되었고, 일체감은 타자로서 식민지인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미개한 식민지인들에게 문명을 전파하는 우월한 영국인이라는 이미지는 영제국의 통합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 **이중혁명;** 18세기 말 서구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이중혁명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은 정치적 근대화의 첫 실험이었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경제적 근대화의 모델이 되었다.

○ **인종:** 근대적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인종적 편견 위에서 ‘우월’한 측이 ‘열등’한 측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영국의 국민 정체성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아일랜드의 통합과정이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분열과 차이가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통합의 기준은 긍정적인 가치의 표현으로 간주된 잉글랜드인에게 맞춰졌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인, 프랑스인, 식민지인들은 반대로 부정적이고 지양해야 하는 속성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졌다.

○ **인클로저:** 기존에는 좁게 구획되어 있던 토지를 통합된 목초지로 바꾸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운동을 의미한다.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적은 노동력으로 큰 이윤을 내는 방법이 되면서 확산되었다. 이는 수많은 농민들을 도시로 보내 산업 노동자가 되도록 하는 효과도 낳았다.

○ **제국:** 영국은 인도, 캐나다,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 등을 식민지로 삼으며 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산업화로 인해 불거진 계급적 갈등은 대영제국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실질적, 상징적 일체감 안에서 대부분 녹아 버렸다.

○ **젠더:** 근대인이란 범주에는 성별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매우 남성적인 개념이었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근대인이란 기준은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의 조건이 봉쇄된 여성들이 성취할 수 없었다. 여성은 국내에 존재하는 타자로서, 남성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즉, 젠더 구분선은 근대성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생각해 볼 문제>>

1.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근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최초의 근대적 산업국가가 되었다. 산업혁명의 과급력은 경제 부문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국에는 모든 면에서 이전과 다른 근대화된 사회가 출현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쥐고 제국으로 군림하던 영국은 근대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었고, 후발 주자들의 근대화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화가 산업화와 동일시되면서,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경제 발전과 물질적 풍요라는 사고가 팽배해졌다. 실제로 산업 혁명이 낳은 물질적 부는 인간의 삶을 순환적이고 맹서스적인 경제에서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 근대화를 설명하거나 달성할 수는 없었다.

근대화를 통해 탄생한 국민 국가는 경제에서 일어난 산업 혁명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필요로 했다. 프랑스혁명은 보통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간주된다. 프랑스혁명은 최초의 시민혁명은 아니지만, 가장 극단적인 국면까지 격렬하게 전개되어 당대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정치사상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근대 정치사상의 두 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제도와 체제로 탈바꿈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 지향으로 삼는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가 놓인 것이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여 산업혁명을 제도적, 정치적으로 뒷받침했고, 산업혁명이 낳은 경제력은 프랑스혁명의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낳았다. 근대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국가의 수립 및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화이다. 양자를 선도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른 근대화 경로를 밟았다는 점은 각 국가, 지역의 근대화 과정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사회의 명암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산업화와 근대화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이전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았다. 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로 물건의 대량 생산과 광범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드디어 맹서스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자본과 이윤의 집중, 계층 간의 격차 심화, 경기 변동과 기술 변화로 인한 주기적인 실업,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도시화 등 구체제와는 양상을 달리한 사회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단 산업혁명은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가 등장해 공장제 생산과 분업이 도입되면서 비숙련 노동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규격화된 저가의 제품이 대량 생산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이었던 농업혁명 역시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높은 생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영국에서 면직물 생산 부문에서 최초로 일어난 기계화는 점차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했고, 원료 운송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철도 건설이 기폭제로 작용해 전 산업의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인구가 주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순환적 발전의 족쇄에서 풀려난 것이다.

공장제의 도입은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높은 강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일단 노동과정을 노동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생산은 노동자보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졌고, 출퇴근과 휴식시간에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고용주들은 임금을 지불하는 만큼 노동자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기계와 분업의 도입은 숙련 노동력의 수요를 크게 줄였고, 여성과 아동 노동을 앞세운 비숙련 노동자가 대규모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숙련 노동자들은 실업을 겪거나 임금 하락 및 독립성을 잃는 등 지위 하락을 겪어야 했다. 남성 중심의 숙련 노동자와 달리 새롭게 임노동시장에 등장한 여성과 어린이들은 싼 임금에 비인간적으로 혹사당했다. 기계의 도입은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아직 사회보장제도는 등장하지 않았고 농촌 공동체는 붕괴되었으며 산업 혁명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비좁고 불결한 도시에서 가까스로 연명해나가기 일쑤였다. 노동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고,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노동운동은 이런 배경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4장 프랑스의 공화국 건설과 식민주의 문제

<<내용 요약>>

1. 프랑스의 정치적 소요

1789-92년 왕정 폐지 이후 1870년 제3 공화국 수립까지 혁명과 쿠데타의 정치적 격변- 2번의 공화국과 2번의 제국 경험.

제3공화국(1875): 전시 상태에서 수립되어 최장기간 지속된 체제,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무너지기까지 약 70년간 유지

2. 프랑스에서의 공화정

1) 공화정의 개념:

- ① 1인의 지배가 아니라 인민 다수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는 제도(정치원리) - 1792년 9월 2일 공화정 선포와 함께 특권자들의 권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인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체임을 천명(인민이란 사회의 거의 전 계층. 부자와 빈민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 대립하는 것도 아님. 소생산자들을 널리 포함).
- ② 전쟁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는 체제: 국민적 혁명 의지와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민에게 보장과 보상을 공약; 소생산자와 중간 부르주아가 합세하여 합의와 분란을 겪어가며 이루어낸 체제(1792년 4월 이후 지속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불리한 전쟁 속에 결집된 혁명의지)

2) 광범위하고 강대한 제국주의국가

- ① 16세기 이래 시도된 식민제국 건설 노력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재개
- ② 제3공화정기에 식민주의 정책이 한층 명백해짐: 아프리카 내륙,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가. 1830년에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본격적으로 진출, 세네갈(Senegal)과 기니(Guinee) 상관(商館) 설치
- 나. 1830년부터 수행된 알제리 정복 - 1842년 남태평양의 타이티와 주변 섬들 보호령화
- 다. 1860년대 인도차이나 점령.
- 라. 1896년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정복 - 자연 자원이 풍부한 세계 4번째의 섬으로 아프리카 남단에서 인도를 향한 항진에 긴요한 전략지
- 마. 1890년대의 10년간: 집결한 서구 열강과 함께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 분할하면서 사하라

이남의 광대한 중앙아프리카 차지

3. 공화국과 식민주의의 관계

1) 공화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의 혁명으로 노예제 존립 근거 폐지

프랑스혁명기 이후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투쟁 루베르튀르가 이끄는 독립 투쟁 등의 반란; 강제 노동방식에 의한 플랜테이션 농업(설탕, 코코아, 커피) 경영의 경제적 비효율성.

2) 프랑스 식민통치의 심각한 폭력성: 프랑스와 식민지의 양자 관계는 서로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측이 지도하는 형태 - 서양 근대화의 척도가 된 개인의 자아와 이성을 다른 인종에게는 부정하는 원칙과 태도

① 알제리 정복, 인도차이나 침공, 마다가스카르 정복: 피식민지인들의 고유한 정신과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기 부정 강제

②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칙 내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對 근대 서구 문명이 성취한 기술력에서 비롯한 서구 우월주의의 갈등 - 인간의 자유 평등을 제창한 프랑스의 보편 정신은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도 동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인종적 우월주의로 비약되면서 논의 지배.

3) 프랑스 공화주의의 투쟁적 휴머니즘: 공화국의 기저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하려는 정치적 의지 - 의회주의와 보통선거권 같은 명시적 제도를 넘어서서 약 한 세기간의 투쟁과 성찰로 이룩

<<용어정리>>

○ 프랑스 근대화: 프랑스의 근대화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가치들은 근대 세계의 정치적 풍경을 바꿔 놓았다. 이후의 모든 혁명과 새로운 국가들이 근대적 정치체제의 모범으로 삼았던 프랑스 공화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기도 했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화국이 타국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국이었다는 모순은 프랑스 근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 프랑스 제3공화국: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 승리하여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던 1870년 가을에 수립되어 최장기간 지속된 정권으로서,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무너지기까지 약 70년간 유지되었다. 1789년 혁명 이래 제3공화국의 수립까지 100년이 안 되는 사이 프랑스는 혁명과 쿠데타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2번의 공화국과 2번의 제국을 세우고 붕괴시켰다. 프랑스에서의 공화주의란 다른 아니라 프랑스식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 제도를 확립시킨 것이 제3공화국이었다. 현재 콜레쥬 드 프랑스 교수인 피에르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은 인민의 정치 참여의 권리를 신장하는 여러 단계를 통해 실현된 것이 제3공화정이라고 설명한다. 프랑스의 대표적 공화주의 역사가인 모리스 아굴롱(Maurice Agulhon)은 제3공화정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제도와 정치적 관행의 토대를 쌓았다고 본다.

○ 소생산자: 프랑스 사회의 큰 특징은 한국이나 영국의 산업화과정과 달리 도시의 소생산자가 상당하게 보존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공화정은 이러한 사회적 특성 위에서 가능했다. 공화정은 생산자가 사회의 근간이며 가치 있다는 인식 위에서 소 재산으로 영위하는 인민의 삶에 대해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주려고 했다.

○ 프랑스 제국: 프랑스는 19세기 후반에 공화국일 뿐 아니라 제국이었다. 영국 다음가는 해외 영토와 주민을 지배하는 강대한 제국이었던 프랑스는 1600년대에 영국, 스페인 세력과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중남미의 카리브 해 연안에 위치한 섬들인 마르티니크(Martinique)

와 과들루프(Guadeloupe), 기안(Guyane) 등을 확보했다. 정치적 안정을 찾은 제3공화정기에 제차 확장된 프랑스의 식민지는 크게 아프리카 내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멀리 인도차이나였다. 프랑스는 세네갈(Senegal)과 기니(Guinee)에 상관(商館)을 설치했고 남태평양의 타이티와 주변 섬들은 1842년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알제리와 인도차이나를 점령했다. 1896년에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를 정복했다. 이 외에 레위니옹(Reunion) 등 인도양 남쪽의 여러 작은 섬들도 차지했다. 1890년대에서 10년간은 서구 열강이 집결하여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하는 시기였고, 사하라 이남의 광대한 중앙아프리카를 차지한 프랑스는 연면적과 연인원, 또 경제적으로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에 다음가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

○ **프랑스 식민주의:** 프랑스 제국주의의 폭력성은 분명하고 심각했다. 식민 통치는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식민지의 민족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려는 프랑스 사회의 원칙과 이러한 식민주의가 양립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종주의 탓이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나는 식민지를 통치해야 하지만 합리적, 인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비판이었고, 나머지는 공산당을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된 식민지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 **알제리:** 북아프리카 연안의 알제리는 프랑스 국토의 5배가 넘는 땅덩어리이며 석유와 광물 그리고 사하라를 가진 자원의 보고이다. 알제리는 지정학적으로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관문이며 역사적으로 고대 페니키아, 로마, 터키의 지배를 차례로 받아온 문명권이다. 프랑스는 1830년 7월 군 병력을 파견하여 해안 도시들과 알제를 공격, 정복했다. 평원지대의 16만 8천 헥타르가 프랑스 행정부로 전유되었고, 1845년 알제리 점령지역 전체가 3개의 프랑스 도(道)로 편입되었다. 이슬람과 아랍어가 금지되었고, 이주한 프랑스인들이 식민사업자로서 지배층을 형성했다. 알제리 고유의 언어와 전통과 의식은 파괴되고 기독교 백인이 산업과 경제 그리고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식민지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 같은 식민지배의 방법과 수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서부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에도 사용되었다.

○ **인도차이나:** 1860년대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점령했다. 이 지역은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의미한다.

○ **마다가스카르:**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는 아프리카 남단에서 인도를 향한 항진에 긴요한 전략지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프랑스는 이 섬을 1896년에 정복했다.

○ **식민지 교육:** 식민지를 겪는 민족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양자 관계는 서로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측이 다른 측을 지도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것은 서양 근대화의 척도가 된 개인의 자아와 이성을 다른 인종에게는 부정하는 태도였다.

○ **프랑스 문화권:** 흔히 프랑스 문화권(Francophone)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흑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내륙, 그리고 캐나다의 일부, 카리브해의 전략적 섬들이 포함된다. 인도차이나 역시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한 불어권 지역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정치적 의미에서 프랑스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 정리해 보자.

정치적 의미에서 프랑스의 근대화는 공화주의로 압축될 수 있다. 공화정은 정치 원리 측면에서 인민 다수에 의한 통치를 실현시키는 제도이며,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이 원칙에 근거해 신분이나 계급, 부로 나뉘지 않는 모든 인민이 주권을 갖는 공화국을 선포했다. 혁명 시기 프랑스에서 공화국은 전쟁으로 국민을 결집시켜 참여를 유도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비상수단이기도 했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왕정 폐지부터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로 즉위할 때까지 이어졌던 제1공화국과 나폴레옹 전쟁 패배 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부르봉 왕조가 복귀할 때까지 대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제1제정, 샤를 10세의 왕정과 7월 혁명으로 즉위한 시민 왕 루이 필립의 7월 왕정, 이를 뒤엎은 2월 혁명과 그 산물인 제2공화국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까지 프랑스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조용할 날이 없었다. 쿠데타와 정변이 끊이지 않는 사이 전쟁 역시 지속되었다. 제3공화국 역시 보불전쟁의 패배와 파리코뮌의 유혈진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전시의 혼란에서 다급하게 수립된 제3공화정은 7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프랑스식 민주주의로서 공화주의의 형성과 제도 확립에 성공했다. 현재 학자들은 제3공화국이 오늘날 프랑스 정치의 직접적 토대를 쌓았다고 평가한다.

대혁명기의 토지 분배로 이루어진 소농 위주의 프랑스 사회는 제3공화정기에 와서는 상당한 수준의 산업화에 도달했고, 본격적인 2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었다. 19세기의 여느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계급 격차가 심각했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시위와 파업으로 표출되는 한편 국가와 고용주의 해결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인구 변화가 적었고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 농민과 도시의 소생산자, 소상공인이 상당히 보존되었고, 다수 농민과 노동자는 하층 부르주아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화국을 이룩한 집단이었으며, 공화국은 소생산자인 인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프랑스혁명이 선언한 자유, 나아가 평등의 구현을 위해 갈등 속에서도 인민이 하나의 공화국을 이룩한다는 역사의식이 공화국을 지탱하는 믿음이었고, 내우외환 중에도 공화국의 시민들은 하나하나 근대인으로서 자의식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2. 프랑스의 식민지가 프랑스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해 논의해 보자.

프랑스는 이미 1500년대부터 식민지 경쟁에 뛰어 들었다. 본격적인 확장에 성공한 17세기에 프랑스는 민간 회사의 식민지 진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프랑스는 식민지와 불공정 무역과 플랜테이션 농장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여타 식민 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와 노동력, 시장을 식민지로부터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와 프랑스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불공정 무역과 플랜테이션 농장은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고, 제국주의가 낳은 경제적 이득은 반드시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마련이었다. 이미 17세기부터 프랑스 왕정은 절대주의 국가의 중앙 권력을 활용해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수탈하는 한편 노예를 부리고 가톨릭을 강요하는 등 폭력적인 통치 구조를 세웠다.

18세기에 영국에 비해 뒤떨어졌던 프랑스의 팽창은 대혁명의 충격에 주춤했다. 혁명가들은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프랑스의 식민지 역시 혁명의 슬로건을 따라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프랑스의 제국주의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보편적인 인권을 부르짖는 대혁명의 기치 아래 프랑스는 구대륙의 특권 계층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신대륙

의 ‘미개인’들을 계몽하는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해방에 대한 열정과 정복욕이 뒤엎힌 프랑스의 팽창은 나폴레옹의 제국에서 재개되었고, 제3공화정에 이르러서는 식민주의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사하라 이남의 중앙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명실 공히 열강이자 제국이었던 프랑스는 공화주의적 이상과 식민주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제국주의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식민지의 현실은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었고 일간지 독자의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당대 크게 유행한 생물학적 인종우열론을 통해 식민지를 바라보았다. 나치 시대까지 유럽에 팽배했던 우생학은 피식민지의 인간과 식민 종주국의 인간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차별하는 시각을 통해 19세기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개별 시민의 수준에서 합리화했던 것이다. 사실 프랑스 내부에서조차 계급간의 격차가 극복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인식은 당대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셈이다. 인종적 우월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을 제창한 혁명 이념과 결부되어 다른 지역과 문화를 프랑스와 동화시켜야 한다는 사명론으로 귀결되었다.

3. 식민주의 비판 사상이 프랑스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혁명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공화국인 동시에 제국이였다. 제국주의 시대의 프랑스인들은 공화국 시민이 인종주의적 식민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중성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당대에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생물학적 인종 우열론, 소위 우생학 열풍은 학문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다수 대중을 무비판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은 주류 의견은 아니었다. 프랑스에서 식민주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온건한 현실비판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현실에 대해 원칙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통치를 촉구하는 견해였다. 나머지 하나는 보다 급진적이고 원칙적인 견해로, 흔히 노동운동가와 공산당 활동가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색인 이주 노동자들과 섞여 살았던 노동자들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식민주의에 반대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결과물인 제국주의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1930년대 파시즘의 대두에 맞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대중운동과, 그 결과로 수립된 인민전선 정부는 식민지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이 비판하는 기존 제도 안에 식민주의를 포함시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차 대전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고조된 민족주의 운동이 과리의 지식인 및 노동자들과 상당한 교류를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인종주의와 결합한 근대화 이념이 식민지인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대부분의 서구인들이 이를 우월한 문명의 사명이란 미명하에 정당화하던 이 시대에도 혁명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다.

5장. 20세기 후반의 프랑스와 탈식민주의

<<내용 요약>>

1.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점령기: 프랑스 근대사 최초의 시련

- 프랑스인들에게 과거의 폐단을 물리치고 소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 제공
- 2차 대전 이후 세계 권력의 중심이 미국과 소련으로 옮겨가는 정세 속에서 세계적인 위상보다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국민의 열망을 따라가는 정치와 사회 추구
- 사회 내부적 변화에 비해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사고에서의 전환은 용이치 않았음.

2. 프랑스 식민지들의 독립: 1945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해방 쟁취

- ① 서부 아프리카와 흑아프리카 지역: 비교적 무난하게 독립
- ② 생트도맹고,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변함없이 프랑스 해외영토로 남아 있음
- ③ 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전쟁을 통한 독립
 - 인도차이나전쟁(1946 - 1954)
 - 알제리전쟁(1954년 11월 - 1962년 3월 휴전협정): 프랑스 정치와 여론 중요.

3. 프랑스 제국주의의 잔재

- ① 알제리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모든 식민지가 사라졌지만 제국주의적인 의식, 즉 식민 지배를 당연시하고 식민지인들을 하대하는 풍토는 프랑스사회에 잔존.
- ② 반식민주의 운동 역시 과감하게 전개

4. 이민노동자 문제와 우익의 창궐

- ① 1960년대부터 사회 안정: 뒤늦은 본격적 산업화와 사회적 민주화 과정, 중간층 안정, 빈부의 양극단의 폭이 크지 않은 사회 건설
- ② 20세기 후반 이민노동자 문제 대두(과거 식민주의의 유산) - 극우의 득세 초래.
 - 해법으로 공화주의의 상기 움직임, 식민지배의 불평등한 제도와 조건 아래서 수많은 식민지인들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하등인간으로 취급받은 것을 직시하는 태도 촉구.

5. 미셸 푸코의 성숙한 근대인: 지나친 불평등과 지나친 불관용 극복 촉구.

<<용어정리>>

○ **프랑스 탈식민주의:**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식민지를 포기해야했다. 특히 나치 점령기를 경험한 프랑스는 전후 패권의 약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달리 국내외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프랑스는 오랫동안 식민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이후 알제리와 인도차이나에서 패배를 경험하고서도, 프랑스 내에는 여전히 식민주의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식민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치적 경향으로 등장한 우익의 인종차별적인 성격은 프랑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탈식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 인도차이나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일어났다. 프랑스는 1945년 일본에게 밀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했으나, 2차 대전 종전 후 다시 군대를 진주시켰다. 중국과 영국 군대가 분할 점령하고 있던 베트남에 프랑스 군대가 다시 들어오자 베트남 인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를 프랑스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 게릴라전 위주로 전투가 전개된다. 인도차이나 전쟁은 초기에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이었으나, 1950년 이후 냉전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각축장으로 변화했다. 프랑스는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네바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보장하는 휴전협정을 맺는다.

○ **알제리전쟁(1954-1962):** 알제리전쟁은 1954년 11월 민족해방전선(FLN) 민족해방군(ALN)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1962년 3월 휴전협정까지 7년 이상 계속되었다. 프랑스는 2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포위작전을 전개, 정치범 탄압과 주민들을 소개, 격리도

불사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구(舊)유럽 식민지의 해방에 긍정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비호 및 제 3세계 유력 국가들의 지원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의 승리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알제리의 탈식민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제리 민중의 강렬한 독립의지였다. 그러나 전쟁과 독립은 프랑스계 알제리인 문제와 민족해방전선의 독선적인 리더십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1962년 3월 예비양협정의 조인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 **드골체제:** 1946년 좌파가 우세한 분위기에서 성립한 제4공화정은 알제리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군인정치가인 드골을 정치지도자로 불러냈다. 드골은 제4공화정이 수립했던 복지국가, 교육체계의 확장과 도시화, 현대화 계획을 이어받았다. 군인인 드골은 제3공화정의 민간 정치기에 나타난 비효율성을 물리치고 권위적 통치로 프랑스의 현대화를 주도했다. 그의 제5공화정은 전례 없이 생산을 중요시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탈바꿈해 갔다.

○ **1960-70년대 프랑스:** 드골 퇴진을 요구한 1968년 5월의 혁명적 사회운동은 지금까지의 프랑스를 전면적으로 반성하게 했다. 68운동은 이제 프랑스가 세계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 아니며 대학생이 많아졌고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드골 정권을 이어 받은 샤방 델마스(Chaban Delmas)와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의 우파 정권은 신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 **1980년대 프랑스:** 1981년 단독으로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은 지방화를 비롯한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의식의 고양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1970-8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좌우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화적인 것이었다. 80년대의 여러 지표가 말해주는대로 프랑스 대중의 지적 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프랑스는 사회적 민주화 과정을 통해 안정된 중간층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어느 한편의 이데올로기나 선동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근대적 사회구조에 다가선 것이다.

○ **이민자 정책:** 최근 프랑스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문제이다. 정치철학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의 특징은 인종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로서 시민을 우선시하는 공화주의이다. 이민자들은 인종 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는 이미 19세기부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럽내외에서 이민을 받았다. 특히 2차 대전 후의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은 탈식민정책과 협력자 처우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더라도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 문제는 가족 이주가 용이해지면서 프랑스 태생 이민자들이 증대하자 첨예하게 부각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와 국적 처리 또 노조 결성 같은 통제 정책에 예민하게 대처해왔다.

○ **프랑스 극우:** 민족전선(FN)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극우는 나치의 역사와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성과 민주주의보다 인종적 순수나 민족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외국인 배타주의가 극우의 속성인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인 셈이다. 현재 프랑스 극우는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할 사람들로 보고 있다. 이슬람이 자체의 형이상학을 갖고 삶의 모든 양상을 결정하고 세우는 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치와 기독교 문명의 원칙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80년대를 전후해 호응을 얻기 시작한 이들 극우파는 현재 상당한 수준의 세력화를 이루어 대통령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 **프랑스 이민사회:**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문학을 통해 발언하고, 서로를 돌보고 종교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부모·자식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종교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의 변

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민자들은 빈곤 및 낮은 교육 상태에서 벗어나 발전해 나가고 있다.

<<생각해 볼 문제>>

1. 과거의 식민주의와 현재의 이민자 사회의 문제점을 연관 지어 논의해 보자.

프랑스 공화주의는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살아간다는 공감을 자국 시민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는 달리 혈연이나 인종적 구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 문제로 동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과 후속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사회 문제에서 국가 정책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문제는 프랑스 공화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종과 피부색,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선까지 프랑스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민주의가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반증하며, 프랑스 사회가 달성한 근대화가 여전히 포괄적인 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주로 병사와 노동자 등의 명목으로 이주해왔다. 주로 유럽 내의 노동이민이 다수이던 19세기를 지나, 1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빈곤에 떠밀려 식민모국을 찾은 북아프리카 노동자들과 전쟁에 동원되었던 식민지 병사들을 받아들리게 된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당해주었으며, 알제리 독립 이후에는 프랑스에 협력했던 하르키를 필두로 상당수의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이 허용한 대로 가족을 데려왔고 그 결과 프랑스 내의 이민자 공동체 규모는 이민 규제법 실시 이후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났다. 이들은 5공화국의 국적법에 근거해 대부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착 주민이며, 프랑스에서 출생한 3세대의 경우 백인과 다를 바 없이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다수가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낮다. 백인 프랑스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비숙련직종 종사자가 많다. 채용될 수 있는 직업과 직장도 제한적이다. 제반 사회적 차별이 이들의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 노동력으로, 전투 병력으로 여러 차례 프랑스의 역사에 기여해왔던 이민자들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지극히 부당하다.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3세대들이 이전 세대가 지켜왔던 침묵을 깨고 자기 목소리를 찾아 항의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외국인 배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갖는 극우파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현재,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로 단순히 통합되려 하기보다 자발적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이민자 공동체는 빈곤에서 벗어나 중간층으로 상승하고 지식인을 배출하는 등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공화주의의 답은 상호 존중과 인정일 것이다. 타자에 주목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지성 사조의 등장도 나름의 응답이다. 식민지배와 공화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존재는 프랑스의 진정한 근대화, 근대인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화주의에 입각한 프랑스 사회에서 극우세력이 대두하는 요인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2002년 프랑스 대선 의 가장 큰 이슈는 민족전선 후보였던 장 마리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진출해 각축을 벌인 일일 것이다. 프랑스 내외를 놀랍게 만든 이 사건은 프랑스의 극우파가 상당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사는 온갖 부침과 파란을 겪어 왔지만 인종주의에 근거해 외국인을 배척하는 극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파시즘이 대두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이다. 민족전선은 1972년 결성되던 당시에는 미미한 세력에 그쳤으나, 프랑스가 중도적 공화국으로 선회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한 80년대부터 지지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주요 정치 세력이 되었다.

민족전선을 필두로 하는 프랑스 극우파들의 논리는 과격한 인종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일반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극우 논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이주민 집단은 인종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없다. 특히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종교인 이슬람은 프랑스가 기본 틀로 삼는 기독교 문명의 원칙을 수용할 수 없는 완결된 형이상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종교에서 오는 가치관 차이를 통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정도로 낙관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파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온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대공황 기에도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상승하자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가난과 차별로 프랑스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한편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민자 문제가 프랑스 사회의 의제로 등장하면서 극우세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복잡한 이민자 문제에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6장 독일의 정치적 근대화

<<내용요약>>

1. 독일의 산업화

- ① 19세기 후반 선진 영국 따라잡기를 국가목표로 설정 -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부정하는 고전경제학을 극복코자 산업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독일적 경제원리 개발.
- ②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은 단기간의 엄청난 산업화 - 정치 및 사회의 놀라운 변화

2. 독일식 자유주의

- ①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원리(독일은 고전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 전통기반이 미약)
- ② 국가권력의 물리적인 정당화 : 독일의 체제수호 철학자들은 이기적 자유를 포기한 윤리적 존재인 국가만이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 가능한, 인간 윤리의 최고 존재로 주장
- ③ 개인의 자유 경시: 개인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생각하는 영국의 자유이념과 크게 다름
- ④ 세계최초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빛을 받함.

3. 독일제국의 성립

- ① 독일 군주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근대적인 민족국가 수립의 절박함 인식
- ② 1848년 혁명을 계기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

- ③ 프로이센: 통일을 위한 노력 가시화의 중심,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 주도,
- ④ 1867년 북독일연방 조직(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소독일주의의 통일 지향)
- ⑤ 1871년 베르사유에서 독일제국의 수립 공포

4. 1차 대전의 발발

19년의 비스마르크 통치 후 1890년 황제 빌헬름 2세가 등극에 즈음하여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폭발 -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1차 대전에 연루 - 독일제국의 악화 초래

<<용어정리>>

○ **관세동맹**: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빈체제를 구축한 반동복고(反動復古)적 유럽에서 독일은 개별 주권을 가진 많은 영방국가들의 모임인 독일연방(Deutscher Bund)을 수립했다. 각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tag)가 독일연방의 행정기구였으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이를 주도해 게르만 민족통일과 자유를 목표로 삼는 모든 정치활동을 탄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경제발전은 지속되었다. 1834년 관세동맹(Zollverein)이 맺어져 통일된 경제시장이 독일에서 열렸다. 오스트리아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1835년에는 독일 최초의 철도도 개설되었다. 독일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문제 역시 대두되었고 독일의 초기 노동운동이 이 시기에 싹을 틔웠다.

○ **독일제국**: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숙원은 소독일주의에 입각한 독일 민족국가의 수립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방해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비스마르크는 북독일연방을 확장시켜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을 수립했다.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이 선포되고, 초대 황제로 프로이센의 국왕인 빌헬름 1세가 즉위했다. '위로부터'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프로이센의 확대에 받아들여졌다. 제국의회(Reichstag)는 제국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권한은 없었지만 제국예산 동의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국재상은 오직 황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정국운영을 위해 제국의회를 고려해야 했다. 제국의회는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나 독일제국에 속해있는 개별 국가들의 의회는 제한 선거권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의 중간 시민계층들은 산업혁명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지만 19세기 후반 독일사회를 좌지우지한 사람들은 군부를 장악한 귀족 신분이었다.

○ **독일의 자유이념**: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자유방임적,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이 약했던 독일이었기에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원리가 별 저항 없이 독일식 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세기 독일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낸 자유 이념은 집단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었다. 독일의 체제수호 철학자들은 이기적 개인 대신 윤리적 존재만이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만이 인간 윤리의 최고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독일의 공식적 자유이념으로 확립시켰다.

○ **역사주의**: 독일에 강하게 남아있던 권위적 가부장적 전통은 서구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봉건적 잔재로 판단되었다. 근대 이후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념을 개발해야만 하였고 그러한 이념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에서 뿌리를 내렸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한 시대가 모두 비견할 수 없이 귀중하다는 역사

주의 이념은, 보편적 발전과정을 따라서는 영국을 따라잡을 수 없던 독일이 고심하여 만들어 낸 야심작이었던 것이다.

○ **북독일연방**: 1850년대 이후 독일의 산업화는 급진전하였다. 19세기 중엽 중공업, 기계공업 중심의 독일은 세계의 공장인 영국보다는 뒤졌으나, 그 발전 속도에서는 더 빠른 양상을 보였다. 프로이센은 산업화를 주도하며 독일 전역의 경제를 압도적으로 장악했고 자유주의 성향의 중간 계급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1861년 탄생한 진보당(Deutsche Fortschrittspartei)과 1862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취임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프로이센 국방예산을 두고 벌인 알력싸움은 비스마르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의 저항을 계속되는 대외 전쟁에서의 승전으로 무력화시켰다. 1864년 덴마크,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충돌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했고 비스마르크는 독일연방 대신 새로이 마인강 북쪽의 국가들로 구성된 북독일연방(Norddeutscher Bund)을 조직하였다.

○ **사회보장제도**: 독일 제국 수립 이후 재상으로 취임한 비스마르크는 19년 동안 전권을 휘둘렀다. 대외적으로 그의 기본 정책은 새로운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대내적으로 좌파 자유주의 계열의 중간 시민층, 정치에 관심을 가진 가톨릭교회 그리고 조직된 노동운동 집단들을 모두 제국의 적으로 간주, 탄압했다. 이 와중에 산업화에 따라 수가 불어난 노동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로서 혁신적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노동자들은 제국의 편에 서지 않았다.

○ **세계정책**: 비스마르크를 몰아낸 빌헬름 2세는 '세계정책(Weltpolitik)'을 표방하며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군함 건조, 식민지 확장을 포함한 영토 확장을 골자로 하는 이 공격적인 정책은 독일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 **제 1차 세계대전**: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면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한 편이고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다른 편이었던 1914년의 전쟁은 의도적으로 전쟁을 계획한 측도, 적극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려 한 측도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 양 진영 모두 단기전을 염두에 두었으나, 독일이 마르느(Marne)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은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1차 대전은 양 진영 모두에게 엄청난 인명 손실과 막대한 전쟁 물자를 퍼붓게 만드는 소모적 장기전이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부의 권력과 영향력은 계속 커졌다. 공식적으로는 힌덴부르크(Hindenburg) 원수가 육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나 실세는 루덴도르프(E. Ludendorff) 장군이었고 전쟁 동안 제국 재상과 황제의 권한은 극도로 축소되었다.

<<생각해 볼 문제>>

1. 독일과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비교해 보자.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영국과 후발주자이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독일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별 국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산업화를 시작한 영국과 달리 독일의 산업화 전략은 국가 주도적인 발전이었다. 영국이 내세운 자유방임주의는 독일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고,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역사주의 또는 국민경제학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독일 당국은 이에 기초한 정책을 독일 실물경제에 널리 적용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형편에 적합한 경제원리의 개발과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은 독일식 경제개발은 짧은 기간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독일의 정치 및 사회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이는 철학부터 국가 정책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산업화의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 채택하는 수단이 되었다.

독일의 자유주의는 영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개인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영국식 자유와 달리 독일은 집단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자유방임적,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이 약했던 독일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이 논리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독일의 체제수호 철학자들은 윤리적 존재만이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고, 국가가 인간 윤리의 최고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일 당국이 펼친 여러 정책들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업이었다. 실제로 독일식 자유 이념은 성공적인 산업화는 물론이고 비스마르크의 세계최초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빛을 받았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는 점점 위협요소로 변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존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의지의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온정적 가부장주의의 구현이기도 했다. 영국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적 전통은 국민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발전과정을 따라서는 영국을 따라잡을 수 없던 독일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주의를 통해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

2. 독일 제국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이후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자.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일을 비롯한 각국 역사가들은 독일에서 나치즘이 발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손더백(sonderweg: another way) 이론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설명들 중 독일 역사의 특수성에 집중한 역사 서술들을 일컫는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손더백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권위주의적인 독일 제국이 성립한 데서부터 나치의 등장 원인을 찾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은 1848년에 정점을 맞았다. 독일에서는 이 해에 자유주의적 민족 정부를 구성하려는 운동이 봉기로 표출되었고, 그 결과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에서 독일의 통일과 입헌 정부 수립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국민 의회는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강제로 해산되었고, 이후 통일된 독일 국가 건설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비스마르크의 주도 하에 보불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독일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독일 제국 시기에 경제적 근대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1848년에 결정적으로 굴복한 자유주의 세력은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국가 주도 근대화의 선두에 섰던 엘리트 집단은 봉건적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정치, 사회 체제를 유지했다. 독일 통일로 일체감을 갖기 시작한 독일 국민들은 시민의식 대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복종과 강력한 군사주의를 토대로 하는 독일 민족주의를 학습해나갔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지배는 중간 계급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적 불만을 해결할 수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패배는 불만에 가득 찬 국민과 권위주의적 정부가 낼 수 있는 최악의 경우였던 셈이다. 전간기의 총체적 혼란 속에서 몰락한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 사회적 근대화를 거부한 독일의 지배 계층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7장 독일의 산업화

<<내용 요약>>

1. 19세기 후반 독일의 경제 상황

1) 제국수립 이전의 경제 상황

- ① 제국 수립 이전의 독일을 형편없는 수준의 농업국가로 평가절하 하기는 어려움 - 특히 1834년 결성된 관세동맹은 독일 경제 발전의 초석 제공
- ② 1848-185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쉬 - 유럽 경제에 자극, 독일에도 최초의 근대적 신용 은행이 영업을 시작했음.
- ③ 1857년 국제적 경제 위기 발생 전까지 엄청난 규모의 철도와 중공업 설비들 건설

2) 독일 제국 수립 이후의 경제: 19세기 후반 독일의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은 독일 제국의 수립과 긴밀한 연관

- ① 시장경제 정신에 입각한 통일적 영업 규정 제정 및 제국 전역에의 적용: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도량형의 미터법으로의 통일, 체신제도 완성
- ② 금본위제에 입각한 단일 통화제 시행(1871년) -> 강력한 중앙 집중적 경제 정책 추진.
- ③ 독일 제국의 경제 기반 안정으로 서구 경제권에 통합 가능.
- ④ 보불전쟁의 성과에 따른 독일 경제 활성화: 알자스로렌의 직물공업과 풍부한 지하자원/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으로 거액의 자본 유입.
- ⑤ 초창기 제국은 독자적인 수입 없이 각 연방 국가들의 분담금에 의존/ 경찰, 사법, 재무, 교육 등의 행정업무는 각 연방국가에 귀속.
- ⑥ 1차 대전 발발 이후 개별 연방 국가들의 고유한 민법이 제국 민법에 흡수.

2. 비약적인 농업 생산과 폭발적인 인구 급증: 독일 산업화의 기초 제공

3. 독일 은행

- ①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거대 산업 발전은 거대 은행의 자본 투자와 밀접한 관련
 - 연합을 통해 조성된 대규모 펀드는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전기, 기계 및 중화학 공업 부문에 투자됨.
 - 대외 무역과 해외 자본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해외 무역과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며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
 - 독일 제국은 독일의 자본이 투자된 해당 국가들과 직, 간접적으로 정치적 관계 설정
- ② 독점화 초래: 중소 규모 공장들의 몰락 추세, 대규모 공장들의 제조업 장악 강화
 - 기업 콘체른이 주요 기업부문 뿐 아니라 관련 산업부문을 함께 지배하면서 독점 일반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위협과 해악 초래

4. 제국주의 경쟁

1) 독일 제국의 제국주의정책

- ① 배경: 자유주의 경제노선에서 보호주의 노선으로 변경/ 급진전된 독일의 산업화와 주요 항구 도시들의 제국 편입/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확보 노력
- ② 제국 수립 직후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팽창에 관심 별무였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시 강대국을 자처하던 독일은 생각을 바꿈. 그러나 독일 식민지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別無

2)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빌헬름 2세의 전쟁 선택(게르만족의 우월함 과시, 국가 위신 강화 추구)

- ① 온갖 외교적 기술을 동원하여 전쟁만은 피하고자 했던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상반됨
- ② 황제의 환심을 얻고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려 했던 군부의 자극과 선동
- ③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는 중공업 기업가 집단 등의 가세.

5. 제3제국을 향하여: 전례 없는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독일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

- ① 사회민주당 주도로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도 문제 해결에 실패
- ② 막대한 전쟁 배상금 지불과 경제공황으로 천문학적인 물가상승 및 초인플레이션 경험
- ③ 독일의 중간계급 붕괴
- ④ 독일인들은 구세주의 등장을 열망

<<용어정리>>

○ **관세동맹:** 1833년 관세동맹(Zollverein)의 체결은 독일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 가운데 초석이었다. 독일의 여러 나라들은 화폐도 달랐고 사람과 물자 모두 국경을 넘을 때마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와중에 체결된 관세동맹은 통일된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모든 독일인들이 절실하게 느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은 1871년 독일제국의 수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제국수립 이전의 독일을 단순한 농업국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제국을 만들어 가는 동안 독일의 경제 역시 대국의 토대를 착실히 쌓고 있었던 것이다.

○ **독일제국:** 1871년 탄생한 독일제국은 성립 초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불확실했지만, 금본위제에 입각한 단일 통화제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중앙 집중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는 서구 경제권에 통합될 수 있었다. 1875년 프로이센 은행이 제국은행으로 재조직되면서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의 든든한 금융기반이 확립되었다. 게다가 1879년 영국에서 개발된 철광제련법이 독일에 전해진 후 알자스로렌의 철광 및 칼륨 광산이 집중 개발되어 독일 강철 및 기계공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패전 프랑스가 지불한 50억 프랑의 전쟁배상금도 독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중화학, 금속 기계, 전기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18세기 말 영국이 주도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혁명에 비견될만한 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 **바이마르공화국:** 1차 대전 패전 이후 사회민주당의 주도하에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은 잘 준비된 체제가 아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유주의적인 정치 체제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생활수준 보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국제 정세의 불안과 무엇보다도 대공황을 전후한 경제 위기를 맞아 근근이 존속하는 것으로도 벅찼다. 독일인들은 제국의 붕괴와 공화정의 수립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안정된 삶을 갈구하였다. 패전 이후의 반성은 끝나지 않는 사회 혼란에 대해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아갔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당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다.

○ **독일의 사회민주당:**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주의 정당인 독일사회민주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최초로 정권을 잡았다.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청산보다 사회 안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차 대전 패전 이후의 혼란은 신생공화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베르사유 조약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불안정했던 사회민주당 정권은 1925년 우파인 힌덴부르크의 대통령 당선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왕정복고파를 포함하

는 연정을 조직했으나 29년 대공황에 의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 **독일의 산업화:** 독일은 중화학, 금속 기계 및 전기부문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이미 영국이 섬유와 직물로 대표되는 경공업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공업 금속, 기계 등의 제품은 내구재 성격을 갖는다. 내구재의 소비는 개별 소비자보다 각 국가 차원의 산업화에 의해 좌우되었다. 게다가 투자되는 자본이 커서 불황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독일은행들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의 은행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상업기능과 투자기능 그리고 투자신탁의 종합기능을 수행하였다. 독일은행들은 주식과 채권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과 투기까지 통제하였다. 대외무역과 해외 자본투자에 있어서도 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은행과 유럽 은행들과의 관계는 교역증진을 위한 재정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미국과는 해외자본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비유럽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독일 동양은행, 독일 아시아은행, 독일 해외 은행 등이 근동, 아시아, 남미 등지의 투자를 주도하였다.

○ **독일과 제 1차 세계대전:** 독일 제 2제국의 수립자이자, 사실상 20여 년간 독일의 통치자였던 비스마르크를 사퇴시킨 빌헬름 2세는 게르만 족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단기전 형태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군부 또한 황제의 환심을 얻고 군의 입지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전쟁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독일인들은 흥분과 기대 속에서 멋진 전쟁이 벌어지길 기대하였다. 과시욕에 휩싸인 젊은 황제와 눈앞의 이익만을 검토하고 있던 중공업 기업가 집단과 또 다른 거대 세력인 군부, 그리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독일인의 우월함만을 맹신하던 독일 국민들은 하나로 뭉뚱 뭉쳐 독일을 재기불능의 파멸로 이끌 위험천만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독일의 이러한 행태는 주변 나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힘과 힘의 충돌이었고 그 결과는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전체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주었다.

○ **독일의 제국주의:** 비스마르크가 자유주의 경제노선에서 보호주의 노선으로 향로를 변경한 후, 독일은 본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급진전된 산업화와 주요 항구 도시들이 제국에 편입된 현실은 식민지 획득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생각을 바꿔 놓았다. 1884년부터 1900년 불과 16년 만에 독일은 아프리카와 중국의 일부 그리고 남태평양의 캐롤라인과 사모아 제도를 식민지로 편입시켰다. 이 기간 독일이 획득한 식민지의 경제적 가치는 신통치 않았다. 독일의 제국주의는 직접적인 이윤 추구보다 국력 과시용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중공업 기업군은 제품의 재고과잉에서 비롯된 경영 악화를 돌파할 기회로 독일 정부에게 제국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생각해 볼 문제>>

1. 독일 제국의 성립과 나치의 등장을 연속선상에 놓고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독일 제국의 성립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완성이자 동시에 독일의 자유주의적 근대화 경로가 결정적으로 실패했다는 표시였다. 제국 수립 이전에도 독일은 꾸준히 경제 발전을 이룩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관세 동맹과 금본위제도를 통한 화폐 단일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위주로 독일 제국을 운영해오던 비스마르크는 보호주의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한 뒤 제국주의적 팽창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권위주의적 정부와 보호주의 경제를 결합한 비스마르크 체제는 사회적 불만을 억압하는 동시에 회유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되었다.

보호무역 정책은 식민지 확장과 이어졌다. 독일 제국은 식민지 운영을 통해 큰 이익을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태반을 책임지고 있던 기업 콘체른들은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고 과감한 군사 행동을 부추기기 일쑤였다. 세기말의 데카당한 분위기에 휩쓸린 유럽인들은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중공업 위주로 발전한데다 독점 기업과 은행에 국가 경제가 주로 의존하고 있던 독일은 과격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기도 했다.

비스마르크를 밀어내고 새롭게 독일 제국을 이끌어나가게 된 황제는 비스마르크가 조심스럽게 이끌어오던 독일 제국을 전쟁으로 밀고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1차 대전의 발발에는 군부와 황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국의 위상 고려, 중공업 중심의 콘체른들의 강력한 요구, 국가 주도 산업화와 후발 산업국으로서의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인 조약 관계도 작용했으므로 하나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황제를 비롯한 독일 제국의 지도층이 현상유지를 원하지 않아 무장에 박차를 가했던 것도, 전쟁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쟁의 패배와 잇단 공황이 나치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나치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을 독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었던 기반 역시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독일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주도하게 된 요인을 논의해 보자.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긴장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였다. 기존에 유럽 외교를 규정했던 세력균형원칙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후발 산업국으로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 1870년대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며, 1890년대 독일이 세계정책의 기초 아래 적극적인 팽창공세에 나서면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독일은 2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간 선두주자로서, 자본과 상품이 누적되어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 시기 기존 열강들은 전 세계를 거의 분할한 상태였으므로 독일이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원칙 위에 세워진 기존 질서가 동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일은 복잡한 외교적 협상과 동맹의 망 속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공세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따라서 1차 대전의 발발에서 독일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을 모두 독일에게 돌려버린 베르사유조약은 문제가 있었다. 1차 대전으로 가는 길에는 유럽 열강들 간의 외교적 협약과 동맹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는 독일로 하여금 2차 대전으로 치닫게 했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었다.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에 대공황의 충격에 빠진 독일은 급속도로 파시즘 체제로 기울어졌고, 또다시 유럽과 세계에 독일에게 걸맞은 새로운 지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호전적인 나치 정권은 전근대적인 기초를 내세우면서도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고, 군수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은 2차 세계 대전을 향해 나아갔다.

8장 미국의 근대화: 산업화와 혁신주의 시대

<<내용요약>>

1. 미국의 산업화

① 남북전쟁 이전 건국 초부터 꾸준한 상공업 진흥정책

② 남북전쟁 이후 폭발적인 산업화 - 철도 확장으로 남부는 중서부와 동부에 연결, 남부의 경제 뿐 아니라 중서부의 경제 활성화

③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④ 거의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대자본가(카네기, 록펠러, 스위프트, 밴더빌트, 모건)에 의한 기업의 대형화

2. 사회문제의 대두: 노동자들의 피해 발생

생산단가 절감을 위하여 고임금 숙련공 기피, 저임금 비숙련공 선호, 여성노동과 아동노동, 노동 환경 악화

3. 노동자들의 저항(미국 노동운동) :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① 1877년 철도 총파업: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한 최초의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 -처음에 파업에 우호적이었던 일반 국민들은 과격할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 외면

② 1886년 시카고의 헤이마켓 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노동운동에 대한 미국 중간계층의 불안이 미국 노동조합운동에 불리하게 작용.

③ 미국 노동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의 창단: 헤이마켓 사태 이후의 분위기 반영. 그 보수성 때문에 19세기 말 보수주의적 산업화시대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존속.

④ 그러나 미국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실패라는 평가 받음.

4. 농민들의 조직화: 산업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조직화

① 공제 조합(Grange) 운동(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 전반): 최초의 농민 운동, 농민들 간의 친교 및 협동조합 기능에 치중. 1870년대 후반 경기 회복으로 세력의 급격한 쇠퇴.

② 농민 동맹(Farmers' Alliance): 1875년 초 남부 농민들 중심의 다소 정치적인 연합체

5. 인민당(Populist Party)의 창립(1892)

① 교통수단 직접 운영, 불법 토지 소유 금지, 통화 제도 개혁, 누진 소득세 제도, 미국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

② 1892년 공황으로 사실상 해체 - 미국은 여전히 탄탄한 자유방임주의 기조 유지. 인민주의자 등 개혁 세력들의 전통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과 개혁은 아직 시기상조.

6. 혁신주의(Progressivism)시대: 1901년부터 1917년까지

① 미국의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보적 사상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 - 단순히 산업화가 낳은 직접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전개

②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통한 사회 참여 신장에도 큰 공헌.

③ 정치인들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분야에서의 괄목할 개혁 성과

④ 대통령의 혁신주의 정책: 미국 혁신주의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 -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슨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정치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개혁 성과

⑤ 1차 대전 이후 자유방임주의 부활, 1920년대 경제 부흥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절정

⑥ 미국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 및 대대적인 수정: 1차 대전 이후 자유방임주의 부활, 1929년 대공황 발발,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 당선 및 뉴딜(New Deal) 시대 도래

<<용어정리>>

○ 공제조합운동: 1860년대 말에서 1870년대 초에 미국 농민들이 벌인 최초의 농민운동. 19

세기 미국의 급격한 산업화는 지금껏 미국 농촌의 중심이었던 소규모 자영농을 크게 위협했다. 이에 대응해 농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이 조직은 공황 시기에 융성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모임에 가까웠으며, 자금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

○ **남북전쟁:** 1861년 발발해 1865년에 끝난 미국의 내전이다.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끝에 남부 노예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시작되었고,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전쟁 기간으로나 피해 규모로나 당대 미국에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전후 남부의 재건이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으며, 경제적으로는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폭발적인 산업화가 일어났다.

○ **노동기사단:** 미국의 초기 노동 운동 단체 중 하나이다. 1860년 필라델피아 의복 재단사들이 만들었고, 1879년 테렌스 파우더리의 지도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폭력적 수단 대신 대화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1886년 헤이마켓 사태 전까지 가장 규모가 컸다. 헤이마켓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으나 여론의 표적이 되어 세력이 급격히 감소했다.

○ **도덕재무장:** 191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우드로 윌슨이 혁신주의 정책을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윌슨은 부조리와 불평등을 조장하는 독점 기업을 뿌리 뽑기 위해 국가 전체의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록펠러, 스윔�트, 카네기:** 남북전쟁 이후의 급격한 산업 발전은 대규모 기업과 기업가들을 창출하였다. 미국 철강 산업을 주도했던 카네기(Andrew Carnegie), ‘스탠다드 오일’로 미국의 석유 산업을 장악했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전국 정육업을 석권하였던 스윔�트(Gustavus Swift)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 **미국 노동 연맹:** 헤이마켓 사태 이후 노동 기사단이 퇴조하는 와중에 사무엘 고퍼스(Samuel Gompers)의 주도로 미국 노동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이 창단되었다. 미국 노동 연맹은 숙련공 중심의 조직이었고 정치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운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미국 노동 연맹은 오랜 기간 성공적인 활동을 벌였지만, 미국 노동운동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부의 복음:** 철강왕으로 잘 알려진 카네기가 1901년에 출간한 책이다. 카네기는 이 책을 통해 부의 사회적 환원이 자본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파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는 대신 성공한 사람이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사회진화론:** 다윈(Charles Darwin)의 적자생존론을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응용해 주창한 이론으로,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William Graham Sumner)가 이 이론을 미국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활용했다. 자연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듯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업, 기업인이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대 다수 미국인들의 동의를 얻었다.

○ **미국의 산업화:** 남북전쟁 이전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의 산업화는 전쟁 중 철도 확장을 토대로 급물살을 탔다. 철도의 확산은 물류 수송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 미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는 육류 소비였다. 중남부의 목축업과 중서부의 도축업이 철도를 통해 결합했다. 철도 건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산업 분야였다. 무엇보다도 기간산업인 철강업이 철도 건설을 통해 성장했다.

○ **시오도어 루즈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혁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1902년 모건의 북부 증권 회사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뒤, 루즈벨트

는 수십 건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리했다. 또한 루즈벨트는 정육 및 식품 관련 입법으로 정부가 위생과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드로 윌슨:** 미국의 28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으로 혁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언더우드 관세법,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진 누진 소득세법, 정부 주도의 보다 신축성 있는 금융 체제를 위한 연방 지불 준비법과 반트러스트 개혁을 위한 입법 등을 주도 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19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개혁 요구를 정부 주도로 실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인민당:** 1892년 창립된 미국 농민 운동 단체이자 정당이다. 공제조합과 농민 동맹을 거치며 보다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된 농민 운동은 인민당에서 정점에 이른다. 인민당은 불법 토지 소유 금지와 통화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누진 소득세, 상원 직접 선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력이 미미했고, 1892년과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 **혁신주의:** 1901년부터 19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개혁 움직임을 가리킨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보적 사상에 근거해 미국의 전통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개혁하려 했다.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이 주축이 되어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생각해 볼 문제>>

1.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 논의해 보자.

남북전쟁 이후, 농업 중심이었던 미국의 경제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남북전쟁 이전에도 상공업은 발달하고 있었으나, 그 속도와 수준이 더디고 낮았다. 전쟁 기간 중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철도가 미국의 본격적인 산업화의 방아쇠가 되었다. 철도는 미국 내의 원료와 상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했고, 철도건설 자체가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철강 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켰다. 철도 확장과 산업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과 기업가를 창출했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은 자급자족하는 농업경제에 가까웠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제조업은 루이지애나 영토의 편입으로 서부 팽창이 시작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에 비해 적은 인구와 원시적인 수준의 운송이 산업 발달의 걸림돌로 작용해, 산업화의 속도는 아주 완만했다. 남북전쟁으로 빠른 운송의 필요가 시급하게 제기되기 전까지 미국의 운송은 주로 기존의 길과 수로에 의존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은 많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효과를 낳았다. 확장되고 발전한 철도를 토대로 미국 각 지역 간의 교역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속도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육류의 운송이 가능해져 중남부 지역의 목축업을 대규모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운송의 발달은 전쟁으로 갈라졌던 미국의 각 지역을 다시 이어 붙이고 이전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하나의 국가경제로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철도의 확장은 곧 철강산업의 발달이기도 했다. 철강산업의 발전은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기계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 단계이기도 하다. 철강 산업은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거대한 규모로 발전해나갔다. 철강 왕으로 유명한 카네기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과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

이다.

2. 미국의 산업혁명을 영국이나 독일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보자.

독일의 산업혁명에서도 보이듯, 후발주자의 산업화는 영국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독일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달리 미국의 산업혁명은 자유방임적인 국가와 개별 기업 간의 경쟁 등 영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철학적으로나 정치 제도 측면에서나 영국적 전통에서 크게 영향 받은 미국은 독일처럼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다. 미국의 고유한 성격은 미국이 유럽과는 달리 새롭게 개척된 식민지였고, 독립 이후 유럽에서처럼 신분제에 따른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좀 더 유연했다는 데서 나온다. 또한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자원대비 인구수가 매우 적어 끊임없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했다는 특징도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었다.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 끊임없는 이민자의 유입, 새로운 기술, 거기다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좁아진 세계 속에서 미국은 전쟁 이전의 산업 발전이나 다른 유럽의 산업화보다 훨씬 빠르고 폭발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말은 미국 사회의 분기점이 된 시기였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는 상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변환되었다. 이 시기는 ‘반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개혁의 출발’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산업화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저항했고, 이는 곧 새로운 개혁의 씨앗을 잉태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형태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화폐제도, 노동 환경, 독과점과 여성 참정권까지 사회의 각 영역을 구석구석 휩쓸고 지나간 혁신주의 운동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9장 미국의 근대화: 개혁의 완성

<<내용 요약>>

1. 1차 대전 이후 보수주의와 적색공포의 광풍: 개방과 다양성 포기, 폐쇄적인 분위기

- ① 국민들은 전후 극심한 경기 침체와 사회불안을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의 탓으로 돌림.
- ② 1920년대 후반 적색공포의 광풍은 반(反)이민 정서와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인종 편견으로 이어짐.
- ③ 1920년대 선거에서 공화당 압승: 보수주의로의 급선회가 정치에 반영 - 하딩, 쿨리지, 후버 대통령들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 국가 간섭 최소화,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효율성 추구

2.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 이면의 심각한 어두움과 인간 소외

3. 미국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 세계대공황

유럽 등 세계 전반의 공황과 연루되어 경제 회복의 어려움 - 미국인의 엄청난 심리적 충격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 ① 1932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된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본질과 국민 정서 간파 - ‘행동하는 행정부’를 약속하고 뉴딜정책 시행

②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주택소유자 대부법 등 제정/ 테네시 계속 개발 공사라는 국가 주도 대공사 주관/ 고용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도모

③ 대공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옴

④ 2차 대전 참전을 계기로 대공황 완전 극복

5. 대공황의 의미: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 - 정부 주도형 사회 복지 국가 추구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체제 종결 :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역할 극대화

<<용어정리>>

○ **기독교 근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분파로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정치,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며 특히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 미국 남부 주들에서는 교육에도 기독교 근본주의를 적용해 진화론을 배격했다.

○ **뉴딜 정책:** 대공황 이후 선출된 민주당 출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적극적인 경제 개입 정책. 긴급 은행법을 통해 금융위기를 넘긴 루즈벨트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주택소유자 대부법 등을 제정했고, 테네시 계속 개발 공사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주도 대공사를 주관하여 고용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전국 노사 관계법과 사회 보장법이 제정되어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대공황:** 1929년 뉴욕 증권 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이후 십여 년간 지속된 세계적 불황을 가리킨다. 1920년대의 호황과 함께 낙관적인 세계관이 대공황을 기점으로 끝났으며, 서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체제가 격변을 겪었다. 대공황의 원인으로는 우선 과잉 생산과 투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자유방임주의의 결과로 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국가 주도의 사업을 통해 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유럽에서 대공황은 독일과 이탈리아 및 여러 국가의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 **보수주의:**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정치, 경제 모두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1920년부터 28년까지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공화당 정부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경제정책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전 시대의 혁신주의와는 상반되는 정책이 행해졌고, 20년대의 호황이 사회적 격차를 가렸다.

○ **토착주의:** 1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에서 고조되었던 반독일 정서에서 출발한 외국인 배척 운동이다. 반공주의와 맞물려 작용했고 주로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토착주의는 오래 갈 수 없었다. 19세기 말 미국은 지나칠 만큼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집합체였고, 국내에서조차 높은 인구 유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토박이나 지역 토박이를 찾기 어려운 미국의 상황에서 정체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쉬웠다.

<<생각해 볼 문제>>

1. 미국에서 토착주의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토착주의란 1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에서 고조되었던 반독일 정서에서 출발한 외국인 배척 운동이다. 반공주의와 맞물려 작용했고 주로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토착주의는 오래 갈 수 없었다. 19세기 말 미국은 지나칠 만큼 다양한 민족, 인

종, 종교, 언어의 집합체였고, 국내에서조차 높은 인구 유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토박이나 지역 토박이를 찾기 어려운 미국의 상황에서 정체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쉬웠다.

미국 인구의 지리적 유동성은 매우 높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지 않았다. 19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태생의 4분의 1 정도는 태어난 주를 떠나 다른 주로 이동을 했다. 인구 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 의회 의원들도 지역 토박이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었다. 전통적으로 가장 인구 유동성이 낮았던 중서부의 아이오와 주에서도 그 인구의 3분의 2는 다른 주 출신들이었다. 산업체를 끼고 있는 보스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더욱 두드러져, 50만 명 가운데 단지 64,000명만이 그 도시 태생이었다.

게다가 미국에는 다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pluralism)가 철저하게 정착했다. 19세기 말 미국은 온갖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집합체였다. 어느 한 집단이 하나의 이념으로 미국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남북 전쟁 이전에 토박이들은 아일랜드인들이 홍수처럼 몰려오자 대대적인 반 가톨릭, 반 아일랜드 이민 배척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수많은 민족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주해 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미국으로 건너왔기에 기존의 미국인들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정할 수 없었다. 서부로 향하는 골드러시와 철도의 발달, 급격한 산업화는 미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미국은 어떤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국가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적 혹은 이념적 논쟁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2. 제 1·2차 세계 대전이 미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차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미국은 승전 이후 정치적 보수화와 함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 이전의 혁신주의 개혁은 화려한 세속 문화와 성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이 절정에 달할수록 그 이면에서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 또한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미국 자본주의 역시 최대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 1929년 10월 24일 월스트리트 증권 시장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후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일소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대공황은 미국이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보다 강력한 국가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복지정책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이었다. 금융, 증권 시장 뿐만 아니라 농업과 산업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경제는 침체의 나락에서 일부나마 되살아날 수 있었다. 빈부 격차와 노동자 문제 역시 사회보장법과 노사 관계법 등을 통해 개혁되었다.

유럽, 특히 독일이 대공황에 의해 받은 타격은 결국 파시즘의 발호와 2차 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미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전쟁에 뛰어 들게 되었다. 셀 수 없는 규모의 피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대공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2차 대전의 참전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역할이 극대화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공황은 미국이 1세기 반 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종결임과 동시에 정부 주도형 사회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이었다.

10장.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근대화

<<내용 요약>>

1. 19세기 중반 이전 러시아의 근대화 노력

1) 표트르 대제의 강제적 서구화

- ①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처해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의 부산물.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경제, 행정, 교육, 종교 등 러시아 사회 전반의 개혁 성과
- ③ 스웨덴에 맞설 강건한 군대 양성 추구: 징병제 도입, 농민들로부터 신병 충당, 군사전문 학교 육성, 무기의 근대화.
- ④ 통치의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구 대폭 정비
- ⑤ 러시아 정교회의 국가에의 종속: 1721년 종무원 설치 - 근대화 비용 충당 위해 러시아 정교회의 막대한 재산 통제 시도
- ⑥ 정부의 경제 개입: 중상주의 이념에 따라 대외 수출 증대 및 국내 공업 보호 시도
- ⑦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혁신
- ⑧ 간소하고 편리한 국민들의 생활 변화 추구

2) 데카브리스트들의 반란과 차다예프의 <철학서한>

- ① 예카테리나 여제: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노력 계승 - 18세기 후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입법위원회 구성, 계몽군주 자처.
- ② 개혁노력의 가속화: 알렉산더 1세 집권기의 자유주의적 개혁 노력, 나폴레옹 전쟁, 알렉산더 1세 사망 직후 발생한 데카브리스트들의 반란
* 데카브리스트들의 반란: 나폴레옹 침공으로 선진적 서유럽 사회를 목도하고 러시아의 후진성에 비애를 느낀 귀족 출신 젊은 장교들은 근대화를 저해하는 농노제 및 진제정의 폐지 등 개혁을 요구하며 봉기, 실패로 끝났지만 1830-1850년대 러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대논쟁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의미
- ③ 차다예프의 <철학서한>(1836): 근대화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된 러시아인들의 고민 반영
- ④ 서구주의자와 슬라브주의자들의 논쟁: 차다예프 이후 1850년대까지 진행된 러시아 지식인들의 격렬한 논쟁 - 양측 모두 농노제 폐지에 동의, 1860년대 초 농노해방으로 이어짐.

3. 알렉산드르 2세의 대개혁과 러시아 제국의 팽창

- ① 크림전쟁과 대개혁
 - 크림전쟁에서의 패배로 자국의 후진성 문제에 관한 논란이 격렬해짐.
 -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을 필두로 사법제도, 군제, 지방 행정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개혁 추진.
 - 1864년 젤스트보(지방 자치기관) 설립 - 공공 업무(도로 건설, 보건 및 교육 등) 담당
- ② 대 투르크 전쟁과 아시아로의 영토 확장
 - 알렉산드르 2세 치세 동안에는 자국 주변의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 팽창에 박차를 가함
 - 특히 치세 후반기인 1875년 형제 슬라브인들을 구한다는 명목 하에 불가리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의 반란을 가혹하게 진압한 투르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임.
 - 투르크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반발로 전리품의 상

당 부분 포기.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및 극동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대함.

4. 근대화의 마지막 시도들: 비테의 공업화와 스톨리핀의 개혁

① 뒤늦은 산업혁명(비테의 공업화)

- 철도공업: 186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근대적 공업 발전 선도, 철도 부설은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 철강 및 석탄업과 석유업도 성장.
- 비테체제: 알렉산드르 3세는 비테(백작)를 재무대신으로 임명, 이후 러시아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철도 부설과 공업 발전을 과감히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 추진. 이를 통해 러시아 공업 생산 급증.
-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농업 무시, 농민들의 간접세 부담 증가. 중간계급의 발전 부진.

② 스톨리핀의 농업개혁

- 자영농민을 육성하여 체제의 안정된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함
- 농민은행 건립: 독립한 농민들의 토지 획득을 위한 자금 대부,
- 토지상환금 폐지

③ 1차 대전의 발발: 근대화 노력들 중단 - 미완의 임무는 볼셰비키 정권의 몫으로 남음.

<<용어정리>>

○ **농노제**: 농민이 봉건 지주에게 예속되어 지대를 납부하고 부역에 동원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알렉산드르 2세가 1861년 농노해방령을 선포하기 전까지, 러시아 농업의 대부분은 농노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서유럽에서 이미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일어나 근대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차다예프의 「철학서한」은 전제정과 함께 농노제를 러시아 후진성의 지표로 지적했고 이는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 **농업 개혁**: 스톨리핀 개혁의 핵심은 농업 개혁이었다. 1905년 혁명('피의 일요일' 사건)에서 농민 공동체의 역할이 컸다고 본 스톨리핀은 부농을 중심으로 농촌을 개편하고자 했다. 그때까지 농민 공동체에서 결정하던 경작 토지의 분배는 개혁 이후 개별 농가의 경작지로 나뉘어졌다. 그 결과 생산량이 늘고 농촌 내에서 계층 분화가 급물살을 탔다. 소수 부유한 농민들은 점점 토지 규모를 불렀고, 농민은 경작할 토지도 잃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 **대개혁**: 크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알렉산드르 2세가 벌였던 근대화 개혁을 가리킨다.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제 폐지를 비롯해 사법제도와 군제, 지방 행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대학 자치의 확대를 비롯하여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공개재판, 변호사 제도 및 배심원 제도 등 근대적인 사법제도도 만들어졌다. 또, 국민 개병제가 도입되고 군대 내 체벌이 금지되는 등 군제 개혁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제 권력 자체의 개혁이 빠진 “대개혁”은 서유럽식 입헌 군주제를 원하는 보다 급진적인 개혁가들을 실망시켰다.

○ **데카브리스트**: 1825년 12월 갓 즉위한 니콜라이 1세에게 입헌공화정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킨 장교 집단을 가리킨다. 나폴레옹 전쟁에 승리한 뒤 알렉산드르 1세를 쫓아 파리에 간 장교들은 러시아와 서유럽의 차이를 절감하고 농노제와 전제정을 어떤 식으로든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는 간단히 진압 당했지만, 이후 러시아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비테 체제**: 1892년 알렉산드르 3세의 재무대신 비테 백작이 공업 발전을 위해 취했던 정책들을 의미한다. 비테 백작은 외국 투자를 적극 유치해 철도를 부설하고 국가의 지원 아래 공업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공업, 특히 중공업을 성장시켰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개혁과 금본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수입관세를 올리는 보호

무역 정책이 이루어졌다. 비테 체제는 농민에 대한 무거운 징세와 토착 자본 및 중간 계급의 부진한 성장, 노동자의 불만 고조 등의 문제를 낳으면서도 1903년까지 계속되었다.

○ **스톨리핀**: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이후, 헌법을 공포한 니콜라이 2세가 택한 수상이다. 스톨리핀은 대지주 출신의 군주주의자로서 혁명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러시아의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농업개혁과 zemstvo의 확대 및 초등 보통교육, 상해보험 프로그램 등이 스톨리핀이 추진했던 정책이다.

○ **제정 러시아**: 러시아 제국을 의미한다.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15세기 비잔틴 제국의 멸망 직후 이반 3세가 모스크바 공국의 군주인 자신을 차르로 칭했지만, 러시아는 17세기 말 표트르 대제에 와서야 국제적으로 제국으로 인정받았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광대한 영토와 농노제, 전제정 등으로 인해 유럽의 강대국이면서도 아시아적인 국가라는 평을 받았다.

○ **zemstvo**: 농노제를 폐지한 알렉산드르 2세가 1864년에 도입한 지방자치 기관. 도로 건설, 보건, 교육 등의 공공 업무를 담당했고 교사나 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시 의회와 함께 지방 자치와 자유주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

<<생각해 볼 문제>>

1. 제정 러시아의 근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정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여러 개혁 조치들은 상당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러시아는 1차 대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으며, 이후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으로 나아간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제정에서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정치적 측면의 근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는 근대화 개혁의 와중에서도 짜르의 전제 권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차 근대화되어가는 사회와 전제정은 점점 심각한 불일치와 마찰을 일으켰고, 이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전제정은 결국 두 차례에 걸친 혁명과 전쟁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근대화는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불균형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알렉산드르 3세의 재무대신이었던 비테 백작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철도를 비롯해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공업 중심지였던 대도시들은 유럽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장 밀집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곧 노동자의 밀집을 의미했다. 한편 산업화의 재원이었던 농민들은 농노 해방 이후 겪어야 했던 경작지 축소와 상환금 지불에 이어 또다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다. 기술 수준을 비롯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은 어디나 다를 것 없이 열악했다. 대중의 불만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해외 자본에 의존적이던 러시아에는 상인이나 자본가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마저 결여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국가를 지지할 계층이 없었다. 1905년 혁명 이후 이점을 절감한 전제정은 스톨리핀을 수상으로 삼고 자영 농민을 육성하려 농업개혁을 시도했다. 농민공동체를 해체하고 계층 분화를 촉진시켰던 스톨리핀 개혁은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낳았지만 다수 농민을 더욱 빈곤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만약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입헌 군주정이나 자유주의 공화정으로 온건하게 이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농민과 노동자 다수의 불만이 고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짜르는 장기화되는 전쟁을 위해 자원과 인력을 점점 더 많이 동원해야 했다. 이미 전제정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성을 잃었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병사들과 수도의 봉기를 막을 힘도 없었다. 며칠에 걸친 대중 시위 끝에 전제정은 붕괴했고, 뒤를 이어 수립된 임시정부는 대중의 급진적 요구에 계속해서 떠밀려갔다. 전쟁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하는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력은 결국 볼셰비키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2. 표트르 대제 이후 시행된 근대화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해 보자.

러시아의 근대화는 표트르 대제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혁은 군사, 행정, 경제, 종교,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서구화를 골자로 했다. 이를 이어 받은 예카테리나 여제는 계몽군주를 자처하며 입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치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알렉산드르 1세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 짜르의 개혁은 전제정을 비판하거나 축소하기는커녕 효과적으로 전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을 경험한 러시아 장교들은 말년에 반동적으로 돌아선 알렉산드르 1세를 비판하고 러시아 전제정, 농노제의 폐지를 목표로 반란을 일으켰다. 니콜라이 1세의 즉위에 맞춰 이루어진 데카브리스트 반란은 싱겁게 실패했고 새로운 짜르를 더욱 보수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알렉산드르 2세에 와서 근대화는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농노해방을 포함하는 사법, 군사,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다. 특히 농노개혁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이전에 지주들이 담당했던 지방행정을 담당할 지방자치기관인 zemstvo가 새로 설립되었다. 시의회가 설립되었고,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학과 군대가 개혁되는 등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성장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2세의 ‘대개혁’은 짜르의 전제권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개혁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알렉산드르 2세의 대개혁에 이어 알렉산드르 3세와 비테 백작이 시행했던 정책은 주로 산업 부문의 근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비테 체제’로 알려진 일련의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은 러시아 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해 중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을 이룩한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대다수의 농민을 절망적인 처지에 빠뜨렸으며, 새롭게 사회적 세력으로 대두한 노동자들 역시 제도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방치했다.

사회적 갈등의 고조는 결국 1905년 혁명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1905년의 혁명은 전제정 자체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두마를 설치해 의회 제도를 도입한 전제정은 경제적으로는 농업 개혁을 시도해 국가를 지지할 자영농민 계층을 확보하고자 했다. 두마 설치와 스톨리핀 개혁의 한편에서 혁명 운동에 대한 탄압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시기 개혁의 목표가 여전히 전제 권력의 유지였음을 잘 보여준다. 스톨리핀에 의해 이루어진 농민 공동체의 해체 및 토지개혁은 농민의 계층화를 조장했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영농이 생기는 한편에서 토지를 잃고 가난해진 빈농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zemstvo가 확대되고 노동 입법이 일부 이루어졌던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11장 러시아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소련 시대

<<내용요약>>

1. 신경제정책

- ① 제 1차 세계대전과 혁명, 내전과 간섭전으로 러시아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산.
- ② ‘전시 공산주의’: 과도한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전면적인 국유화나 화폐 폐지 등) - 사정을 더욱 악화시킴.
- ③ 신경제정책(NEP) 도입(1921년 3월 제 10차 공산당 대회): 레닌의 제안, 경제 전반에 시장 원리를 어느 정도 도입함으로써 혼합 경제를 조직하고 경제 회복을 꾀함.
 - 가. 곡물 할당 징발제를 식량 현물세로 대체: 농민들은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 팔 수 있게 됨.
 - 나. 농민들의 토지 임대 및 노동자 고용 허용: 농민들의 생산성 증진 도모 가능성.
 - 다. 국가는 은행, 운송, 통신, 해외 무역 및 중간 이상 규모의 기업만 통제.
 - 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쟁적 노동 시장에 자유로운 참여 가능.
 - 마.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제를 개방하여 벌목과 광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

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성립(1922년 12월)

- ① 신경제 정책의 성과: 해외 투자 유치에는 실패,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 국민들의 생활수준 고양, 사회적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자유로워짐.
- ② 소비에트 권력의 확고한 정착: 러시아 공화국을 핵심으로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성립

3. 강제적 공업화와 그 결과들: 스탈린의 폭력적 농업 집단화와 급속한 공업화

- ① 신경제정책의 사실상 폐지: 1928년 말 스탈린의 주도
- ② 스탈린의 권력 장악: 공산당 내의 1인자로 부상
- ③ 폭력적 농업 집단화를 동반한 급속한 공업화 전략(새로운 근대화 프로그램으로 채택)
 - 1· 2차 5개년 공업화 계획 실시
- ④ 중공업 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목표에 이르지 못함 - 특히 농업과 경공업의 성과는 현저히 미흡
- ⑤ 비현실적인 목표와 자원 및 노동력의 무모한 동원은 소비에트 사회에 부정적 유산 초래
 -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은 국민 생활 피해
 - 농업 생산은 집단화로 파탄

4. 제 2차 세계대전과 ‘소련 제국’의 형성

- ① 히틀러의 침공: 히틀러의 등장은 소련의 근대화 전략 위협, 독일과의 불가침 협정에도 불구하고 1941년 6월 히틀러의 소련 침공, 개전 초기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
- ② 소련의 승리: 1942-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를 기점으로 상황 반전, 소련군은 1945년 봄 베를린 점령.
- ③ 소련의 동유럽 장악: 동유럽에 영향력 확대 시도
 -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고자 함
 - 특히 동유럽 지역 전체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이용하고자 함. -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의 점령 지역에서 지위를 굳혀감.

5. 동유럽의 반란과 소련제국의 위기

① 스탈린의 사망(1953년)

-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흐루시초프 등장(1955년)
- 스탈린 격하 운동 개시(1956년 제 20차 공산당 대회)
- 기존 대외 정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 '평화공존론'은 향후 소련 외교의 기본 방침이 됨.

② 외교정책 변화가 초래한 큰 파장

-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유혈사태: 소련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일단락,
- 1956년 이후 동유럽 정권들의 안정세
- 1968년 봄 체코의 대규모 개혁운동: 소련 지도부의 무력 진압.

③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정책

- 동유럽 사회의 대변혁
-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는 소연방 자체의 해체와 동시 진행
- 1990년 이후 발트 3국의 독립은 소연방 해체에 결정적 역할

<<용어정리>>

○ **네프멘**: 신경제정책의 결과 생겨난 소규모 사기업가들을 가리키는 말. 네프멘은 소련 지도자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복귀 징후로 여겨져 맹렬한 공격을 당했다.

○ **독소 불가침 협정**: 2차 대전 직전 소련과 나치 독일이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 나치 독일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어가는 과정에서 연합국과의 집단안보를 고려했던 소련은 독일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대선회한다. 체제의 성격상 상호 적대적이었던 두 국가의 조약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공산주의 운동 진영의 충격이 컸다. 이 협정의 비밀 보충 협약에서 소련은 혁명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폴란드의 3분의 1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핀란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루마니아에 편입되었던 베사라비아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 받았으며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발트 3국, 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 및 폴란드와 핀란드 일부를 합병했다.

○ **볼셰비키**: 1889년 창당된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의 분파였으며 소련공산당의 모체. 1917년 10월 혁명을 주도해 러시아의 사회주의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지도자는 레닌이다. 볼셰비키라는 이름은 다수파라는 뜻인데, 1903년 2차 당 대회에서 당원 규정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름과는 달리, 정권을 잡게 된 1917년 10월 이전까지 가장 급진적인 좌익 분파로서 극소수에 그쳤다.

○ **사회주의 혁명**: 1917년 10월 세계 최초로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을 사회가 공유해 경쟁 없이 이상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혁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 **소비에트 정권**: 1917년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가 세운 권력. 1991년 해체될 때까지 냉전의 한 축이자 동구권을 대표하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세계 혁명을 지지하면서 제 3세계의 탈 식민운동에 상당한 양의 지원을 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동구권 국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했고, 중국이나 쿠바와는 줄곧 불편한 관계였다.

○ **스탈린 혁명**: 반대파를 몰아내고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실행한 5개년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라 일어난 러시아 사회 전반의 변화를

통칭하는 말. 스탈린은 중공업 위주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 분명하게 개선된 일상생활을 러시아인들에게 남겼다. 이 덕분에 소비에트 러시아는 2차 대전 중 독일과 싸워 이길 수 있었으며, 생산량 경쟁에서 성공한 개인들을 비롯해 당 간부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보다 풍족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 **신경제정책**: 1921년~28년 사이 소련이 채택했던 경제정책. 러시아 공산당은 1차 대전과 혁명, 내전과 간섭전의 충격으로 파탄해진 러시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시공산주의 정책에서 신경제정책으로 돌아섰다. 전면적인 국유화와 화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시공산주의 대신 도입된 신경제정책은 농민과 소규모 기업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경쟁을 도입했으며,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했다.

○ **체코슬로바키아 반란**: 1968년 봄 뭉체크가 공산당 1서기로 선출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대규모로 일어나 소련군에 의해 진압된 개혁운동. 프라하의 봄이라고도 불린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지신인과 민중을 아우르는 개혁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바르샤바 조약의 유지를 목적으로 개입한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고르바초프가 벌인 개혁 정책으로, 경직된 소련 사회를 쇄신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나 결국 소련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폴란드 연대노조의 선거 승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혁명,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 여파로 동유럽 블록 해체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브레주네프 독트린의 폐기와 ‘신사고’ 정책 등이 이런 경향을 부추겼다.

○ **폴란드 개혁 운동**: 1956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하는 시위와 그 뒤에 이어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이 개혁정부를 구성한 일. 1955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지도자로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비판 연설 이후 평화 공존론을 주장했다. 자생 스탈린주의자 대신 고무우카를 중심으로 폴란드는 경직된 스탈린주의 체제를 이완시키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다.

○ **헝가리 봉기**: 1956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반정부 봉기를 일컫는 용어. 소련과 유착해 일당 독재를 펼치는 헝가리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흐루시초프의 집권과 폴란드 개혁 운동의 자극을 받아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군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임레나지의 개혁정부까지도 바르샤바조약 기구 탈퇴를 선언해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했다.

<<생각해 볼 문제>>

1. 소련이 몰락한 원인에 관해 생각해 보자.

스탈린 사망이후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부터 시작된 소련의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외교 방침의 변경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새로운 노선에 반발했고, 서유럽 공산당들은 유로 코뮤니즘 노선으로 응답했으며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개혁 및 이탈의 움직임을 보였다. 소련은 폴란드와 헝가리에 강력하게 개입했으며, 특히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력을 투입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과 뒤 이은 소련의 무력개입은 이런 맥락 위에 있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브레주네프 독트린을 통해 무력개입을 정당화했다. 80년대 폴란드에서 연대 노조의 저항이 거세어졌을 때도 소련군은 브레주네프 독트린에 의지해 개입할 수 있었다.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우위는 결국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소련에서 경직된 공산당 관료제와 점차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대중 사이의 괴리

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사회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당 총서기로 취임해 레닌주의로 되돌아가자는 표어아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서 ‘글라스노스트(공개성)’ 정책을 천명했다. 이는 시의 적절했던 만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으며 실제로 소련에는 큰 혼란이 일어닥쳤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소련이 맞닥뜨린 전반적 문제의 핵심 원인은 당이었다. 공산당은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했지만 방법을 두고 보수파, 개혁파로 나뉘었다. 분열은 계속되어, 보수파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파벌과 완만한 개혁을 주장하는 파벌로 나뉘었고, 개혁파는 공산주의 안에서 급진적 개혁을 실시하려는 파벌과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파벌로 갈라졌다. 분열된 당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당에 의존하던 국가권력은 진공 상태에 빠진데다 글라스노스트가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큰 타격을 가했다. 그 와중에도 인민의 생활고는 가중되었다.

소련 내부의 변화와 함께, 폴란드 연대노조를 시작으로 동유럽 전반에 걸쳐 개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경직된 공산당 정권이 개혁을 시작하거나 개혁적 정부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유럽 국가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도 이루어졌다. 분리주의 운동이 거세어졌고, 결국 발트 3국이 독립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엘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연방 내의 공화국들이 잇달아 주권을 천명했다. 1991년 8월, 혼란 속에서 공산당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시민의 반발과 군부의 비협조로 3일 만에 실패한 보수파의 쿠데타는 공산당의 불법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결정적인 조치였다. 공산당은 소비에트 연방을 유지하는 핵심 고리였고, 공산당의 소멸은 곧 연방의 해체를 의미했다. 엘친은 소련을 대체할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켰다. 소련이 해체된 것이다.

2. 소련 체제 확립 이후 소련의 영토 확장 과정을 제국주의적 팽창과 비교해 보자.

소련의 영토 확장은 크게 세 개의 기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의 패전으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무효화되면서 할양되었던 영토를 되찾았을 때이다. 이로써 1922년, 제정러시아의 영토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영토를 회복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성립된다. 두 번째 확장은 독소불가침조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조약의 비밀 보충 협약은 제정러시아의 영토였던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베사라비아를 소련에게 보장하고 있었다.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소련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효과적으로 저항했던 핀란드 역시 일부 영토를 합병당하고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상호원조협정을 맺어야 했다. 마지막 확장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소련은 독일 동부를 점령하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로부터 영토의 일부를 합병하고 인정받았다. 더 나아가 소련은 동유럽을 서구권의 침략을 막는 완충지대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련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독일의 점령지역을 소비에트화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947년 9월에 미국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설 조직인 “코민포름”(Cominform)이 창설되었다. 1949년에는 소련이 중심이 되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구성되고, 1950년대 중반에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창설되었다. 이 기구들은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주의 이념이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반제국주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물론 소련의 영토 확장은 고전적 의미의 식민지 정복과는 양상이 달랐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독립한 옛 식민지들에 미치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소련은 탈식민시대의 방법으로 식민지를 확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은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위계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크게는 냉전 구도부터 작게는 개별 국가간의 상호 이해관계까지 국제정치적 역관계가 소련의 영토 팽창을 촉진하거나 제한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련의 우위는 분명했다.

12장 스웨덴의 산업화

<<내용요약>>

1. 산업화와 스웨덴

- ① 산업화 이전의 스웨덴: 적은 인구의 빈곤한 농업국
- ② 1850년 이후 산업화 시작: 스칸디나비아의 뒤늦은 산업화
- ③ 1914년 무렵 산업사회로 변모:
 - 인구 급증
 - 철도 부설에 따른 지역 간 연결은 산업의 전제 조건들을 변화시켰음
 - 공업 생산은 15배 증가

2. 농업의 구조적 변화: 농업성장으로 산업화의 전제조건들 형성

농업의 개선, 상업화, 팽창과 성장은 산업화의 전제조건들 형성 - 시장, 노동력, 원료 공급

- ① 인구증가: 18세기 이래 꾸준한 인구 증가 -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의 지속과 예방접종, 감자(식량) 등의 기여로 사망률 감소

②식량증산:

가. 인구 증가는 식량의 증산을 자극: 인구 과잉에 따른 곡가 상승은 다시 식량 증산 자극.

나. 토지의 개간을 통한 경작지 확대와 토지의 사유화: 농업의 시장 지향성 강화와 연관

경지통합법 공포(1749, 1757년) -> 모든 농민은 자신의 보유지 통합을 요구할 권리 보유
-> 사유화 작업의 절정

농민들이 보유한 지조들이 통합됨으로써 경작지 분할 용이, 농민들의 토지는 더 큰 단위로 결합,

공유지와 방목지는 개별 소유주들에게 분할

영농방식의 개선으로 휴경지 면적 크게 감소.

- ③ 농촌사회의 분화: 인구 증가로 경작지가 부족해지자 농촌 프롤레타리아트 양산

- ④ 농촌특화적인 상품 생산: 공업 침투 이전 농업사회의 틀 속에서 특화된 상품 생산 정착: 목재 일상용품의 수공 제작, 구리 제품의 생산, 선대상인(원료를 제공하여 물건을 만들게 함)이 조직한 가내 수공업.

3. 산업화의 진전, 1850-1914

1) 수출 산업의 시대

- ① 스웨덴의 초기 산업화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

② 수출산업으로서의 제재업과 제철업이 1850년대에서 1870년대까지의 스웨덴 공업화 초기에 경제의 견인차 역할

③ 1870년대에 목재업과 제철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

④ 그 외 중요 산업

- 내수 시장을 겨냥한 직물산업: 1850년대 방적공장 설립, 면직물 판매, 모직물 기계제작
- 식량 생산, 제분, 양조, 도축, 낙농에서도 공업적 생산방식이 적용, 생산량 증가

2) 국가의 역할

① 1870년대까지는 자유무역의 시대

② 1870년대 이후 1890년대 호황기: 경제정책의 변화로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

- 스웨덴 수출품은 타국의 경쟁에 직면,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
- 농업과 공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 높임.
- 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증대(특히 철도, 금융 부문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

3) 산업화의 완성

기술 혁신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수출의 토대 마련 - 자본재, 건설 자재, 소비재 산업에서 스웨덴 경제 팽창 - 산업화 초기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주로 영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산업화의 완성으로 스웨덴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훨씬 우세

① 1880-1913년: 공업의 급성장, 농업은 생산 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더디게 성장

② 1890년대: 농업의 절대 인구 감소/ 내수 시장이 수출 시장보다 더 팽창하여 산업이 내수 시장을 보다 지향

② 전통적인 수출 산업이 국내 원료를 더 많이 사용(사례: 목재)

③ 제철업은 전형적인 수출 산업에서 내수 산업으로 전환.

4. 산업화의 결과

① 산업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 1800년대 중반부터 국민총생산 증가, 인구 증가, 생활수준 개선

② 부정적인 결과: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생활환경.

③ 노동계급의 성장: 노동조합 설립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협약 보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AP) 창당(1889)으로 정치 부문의 노동운동 시작

5. 스웨덴 혁명: 의회주의와 성인 남녀의 보통 선거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

① 1917년 하원 선거에서 좌파의 대승리와 의회주의의 확립

-> 자유당 당수 에덴의 사회민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으로 의회주의는 명백히 인정됨.

② 1918년 12월 6일의 헌법 개정과 민주주의의 도입

- 사회민주주의 좌익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기반
- 총선에서 납세 기준 폐지, 지방선거에 보통 평등 선거 도입, 여성참정권 인정

<<용어정리>>

○ **경지통합법**: 18세기 인구증가와 식량 증산의 경향을 촉진한 국가 주도 토지 사유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 법은 이전까지 좁고 긴 지조 형태로 산재해 있던 개별 농민의 소유지를 단일한 경작지로 결합시켜 촌락공동체와 무관한 개별 농민의 농지경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749년, 1757년에 공포되었으며 농업의 시장 지향성 강화와 맞물려 있었다.

○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스웨덴 최초의 근대적 정당이자 개혁주의 정당이다. 1889년에 창당했으며 토지와 숲, 공장, 교통수단의 사회화, 성인 남녀의 보통·평등 선거권, 8시간 노동

제, 소득·재산·상속의 누진세 등이 주요 강령이었다. 브란팅을 중심으로 한 사민당 1세대는 폭력혁명을 지양하고 보통선거권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해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다.

○ **산업화:** 스웨덴은 1850년 이후 산업화의 대열에 합류하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 무렵이면 산업사회로 변모한다. 그 기간 동안 인구는 거의 60%가 증가했고, 도시인구 역시 증가해 1913년이면 스웨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철도의 부설과 공업생산 증가의 결과 1913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농업부문 이외의 영역에서 생계를 꾸리게 되었다. 그 당시 거의 2백 만 명이 산업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스웨덴 경제는 국제 경제에 편입되었다.

○ **산업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 중 하나로 산업생산이 주된 이윤 창출 수단이 된 단계를 의미한다. 스웨덴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펄프, 제철업, 기계공업 등의 자본재 생산이 성장했으며, 소비재 부문에서도 면직, 모직업과 담배제조, 양조, 제분 등의 업종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 **스웨덴 혁명:**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 신분제 의회가 폐지된 뒤에도 스웨덴 의회는 오랫동안 불평등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의회주의와 성인 남녀의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는 것은 스웨덴 혁명을 통해서였다. 1차 대전이 장기화되면서 스웨덴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고, 대중적인 불만이 반영된 1917년 선거에서 좌파가 크게 승리했다. 명백해진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한 좌파는 납세에 따른 차등 없는 보통선거와 의회정부 및 여성참정권을 실현시켰다.

○ **12월의 타협:** 1906년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이루어진 상호 권리에 대한 합의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을 지도하고 분배할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905년 최초로 체결된 기계공업부문의 단체협약이 본보기가 되어 각 부문별 단체협약이 이루어졌고, 12월의 타협은 노총과 고용주연합이 중앙 차원의 협상을 벌인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노조는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고, 고용주는 노동 시장을 규제해 예측가능성을 늘릴 수 있었다.

○ **오카르프 법:** 1899년에 제정된 법률로 타인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제공된 작업을 거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징역 2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노동운동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함께 성장해 1890년대에 이미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산별노조와 전국적 규모의 노총이 등장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단결권, 파업권은 지배계급의 저항에 부딪혔다. 오카르프 법은 이러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노조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법률이었다.

<<생각해 볼 문제>>

1. 스웨덴 산업화와 스웨덴 혁명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시작된 스웨덴의 근대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스웨덴을 땀서스적 세계에서 벗어나게 했다. 19세기 중반, 스웨덴의 국민총생산과 인구는 함께 증가했고 생활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업은 토지의 통합과 사유화 이후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고, 영국 산업이 주로 소비하던 스웨덴의 목재와 철 역시 스웨덴의 산업이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산업화는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탄생시켰다.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감

시를 받으며 기계의 리듬에 따라 장시간 작업해야 했다. 또한 인구가 밀집한 공업지대의 노동자 주거환경은 매우 비위생적이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형성된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맺으려 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까지는 고용주들과의 혹독한 투쟁을 겪어야 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당이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보통선거권과 의회주의의 쟁취라는 목표를 낳았고, 그 목표는 1917-8년의 혁명을 통해 실현되었다.

스웨덴 혁명은 의회주의를 확립하고 성인남녀의 보통 선거제를 이룩했다. 이미 19세기 말 산업화의 심화와 더불어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 창당된 바 있었다. 명확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좌파는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했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1918년 12월 6일, 스웨덴은 사민당의 성명서에 기초한 헌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불평등 선거였던 제도를 고쳐 보통, 평등 선거로 바꾸고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등 급진적인 조치들이었다.

2. 스웨덴의 산업화에 국가의 역할이 미친 영향에 관해 논의해 보자.

스웨덴은 1850년 이후 산업화의 대열에 합류하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 무렵 산업사회로 변모했다. 그 기간 동안 인구는 거의 60%가 증가했고, 도시인구 역시 증가해 1913년이면 스웨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철도의 부설과 공업생산 증가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농업부문 이외의 영역에서 생계를 꾸리게 되었고, 산업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거의 2백 만 명이었다.

스웨덴의 산업화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후발주자들의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18세기에 산업화의 전제조건을 만들어낸 인구증가와 식량 증산은 국가가 주도한 토지 사유화 정책에 의해 가능했다. 국가는 경지통합법을 통해 촌락공동체와 무관한 개별 농민의 농지경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농업의 시장 지향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스웨덴 농업의 성장이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 자유방임을 견지해 오던 스웨덴 정부는 1870년대 이후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자 보호주의로 돌아섰다. 일단 국가는 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국유 철도를 건설하여 수송 능력을 제고하는 한 편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했고, 상업은행의 자본 조달을 지원했다.

1906년,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상호 권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개입은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12월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을 지도하고 분배할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1905년 최초로 체결된 기계공업부문의 단체협약이 본보기가 되어 각 부문별 단체협약이 이루어졌고, 12월의 타협은 노총과 고용주연합이 중앙 차원의 협상을 벌인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노조는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고, 고용주는 노동 시장을 규제해 예측가능성을 늘릴 수 있었다. 국가는 한 편으로 오텔라프 법을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다른 국가의 개입 방식과 달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13장 복지국가 스웨덴

<<내용 요약>>

1. 스웨덴 모델

가난한 농업국 스웨덴이 189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직면한 사회문제들을 꾸준히 해결하면서 20세기 말 완전 고용과 각종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 발전모델을 지칭하는 말

함의: ① 노동시장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지칭함

② 1930년대부터 발전한 복지국가 지칭(사회민주당은 스웨덴 모델 형성에 주도적 역할)

③ 넓은 의미의 스웨덴 모델은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뜻함.

2. 사회 문제와 초기 사회 정책: 산업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① 여성과 아동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정(1881년 법) - 아동 노동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제한됨.

② 독일로부터의 영향과 함께 시민 복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 강조.

- 대표적인 사회 정책 선구자로서의 도시 출신 자유주의자들:

사회정책 형성 초기에 담론과 실천 주도, 자조와 개인의 책임 지원을 목표로 설정.

- 1903년 창설된 <사회사업중앙연맹(CSA)>: 여성 박애주의자들의 설립/ 초기 사회 정책에서 중요 역할 담당/자발성, 예방적 자조, 개인의 책임을 기본사상으로 함.

③ 정세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발한 전개, 사회민주당의 의회 진출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 증대

④ 사회민주당의 실업보험 도입 시도와 실패

가. '스웨덴 혁명'(1918) 이전: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보다는 보통 선거제의 쟁취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나. '스웨덴 혁명'(1918) 이후: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업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과제에 직면 - 1920년대 사회민주당은 실업보험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

다. 1930년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스웨덴의 실업률 상승

-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큰 타격, 1932-33년에 노조 가입자의 20%를 상회하는 실업률, 라. 사회민주당의 대책: 생산증대, 기술적 합리화, 실업보험의 도입

- 빈곤의 균등한 분배보다 인민의 복지를 위한 생산의 증대를 우선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합리화 시도, 노동자들의 이직과 지역적 이동의 불가피, 합리화 과정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실업보험을 통한 지원 시도

마. 실업보험 도입의 실패: 부르주아 정당들의 반대, 부르주아 정당은 실업보험이 노조의 힘을 증대시켜 사회민주당을 강화시킬 것 우려.

3. 인민의 집, 위기협약, 살트셰바드 협약

① 실업보험 도입에 실패한 사회민주당은 1920년대 내내 난국에 봉착.

② 1928년 선거 패배(이유 - 급진적 상속법 제출, 선거 당시 공산당과의 협력, 농업 위기)

③ '인민의 집': 1928년 당 대회에서 페르 알빈 한손이 주장한 당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 사회는 국민에게 집과 같은 곳으로 실업에 처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노년이 된 국민을 돌 볼 책임이 있으며, 계급의 간극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함.

④ '위기협약'

- 1932년 절정에 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농민당과 사회민주당의 타협에 의한 협약

- 세계 경제의 위기로 스웨덴 농민의 육류 및 유제품 수출의 큰 타격

- 농민당과 사회민주당은 실업 정책과 마가린 소비에 대한 소비세 도입 및 축산물 가격

보장 등의 농업 지원책을 상호 수용함으로써 ‘위기협약’ 체결.

⑤ 살트셰바드 협약

- 1938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채 노동시장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총과 고용주 연합의 협약 체결

- 협력의 분위기 조성, 전후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토대를 이룸.

4. 복지국가의 건설

① 사회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복지정책의 목표 - 누진세를 통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와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예방적 사회 정책

② 다양한 사회정책 시행

가. 1934년 실업보험 도입

나. 1930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모성 수당, 임산부의 진료비와 출산 비용 지원

다. 1950년대: 예방적 사회정책의 성격을 띤 연대 임금 정책 채택.

③ 스웨덴 복지국가: 생산의 촉진과 예방적 사회정책 지향. 고용과 재교육, 직업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질병과 재해의 예방, 가족 지원에 많은 투자.

5.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 이룩한 근대 국가의 모범

① 국가 - 스웨덴 복지국가는 국가가 모든 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수립됨

② 스웨덴의 오랜 민주주의적 전통

③ 사회민주당의 역할

④ 무엇보다 타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의 산물

<<용어정리>>

○ **국가실업위원회:** 1920년대에 스웨덴의 실업자 구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 전후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민당은 실업보험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르주아 정당과 타협해야 했다. 사민당이 임시방편으로 받아들인 국가실업위원회는 적은 규모의 현금지원과 저임금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던 취로사업을 병행했다. 국가실업위원회는 실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다. 사민당은 여기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 **복지국가:** 세금과 사회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 1970년대~80년대에 그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 복지국가는 생산을 촉진하고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미 20세기 초에 틀이 잡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안정도 함께 가져왔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을 휩쓴 파시즘도 스웨덴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사업중앙연맹:** 1903년 자유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 박애주의자들이 설립해 활동했던 단체. 사회사업중앙연맹은 계몽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사업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고 자발성, 예방적 자조, 개인의 책임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초기 사회정책을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개혁을 자조와 개인의 책임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추진했다.

○ **사회 정책:**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문제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 국

가 차원의 해결책을 필요로 했다. 이를 사회 정책이라고 한다. 사회정책은 여성과 아동을 과
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법률로 각종 보험을 보장하고 노
동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스웨덴 모델:** 스웨덴이 사회정책과 완전고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가
난한 농업국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 스웨덴 모델은 첫째, 노동
시장 당사자인 스웨덴 노총과 스웨덴고용주 연합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둘째, 1930년대부
터 사민당의 주도하에 발전한 복지국가를 말한다. 셋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 스웨덴 모델은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의미한다.

○ **샬트셰바드 협약:** 1938년 스웨덴노총과 고용주연합이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노동시장에
서 분쟁을 피할 방식을 찾은 결과 합의한 주 협약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협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노조나 사업장이 자의적으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협약의 실행을 맡는 중앙노동시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주 협약에 이어지는 후속협약이 뒤를 이어 분쟁 시 교섭 절차가 완비되었다. 이 협약에 따
른 협력 분위기는 전후 스웨덴의 경제, 사회적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 **연대 임금 정책:** 1950년대 사민당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예방적 사회정책이었던 정책으
로 단일 산업 분야 내에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1951년
노총 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입안자의 이름을 따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불린다. 노총과 고
용주연합 간의 협력을 토대로 안정적인 임금협상과 산업평화를 구축해 고성장과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노동시장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생산을
촉진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위기협약:** 1932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당과 사민당이 체결한 협약. 사민당의
비그포르스는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와 농민이 상호구매를 통해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농민이 수출에서 입은
타격을 스웨덴 노동자의 구매력 증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실업정
책을 내세운 사민당은 1932년 선거의 불완전한 승리 이후 농민당과 접촉해 마가린에 대한
소비세 및 축산물 가격 보장 등의 농민당 정책을 수용했다.

○ **인민의 집:** 1928년 스웨덴 사민당 당대회에서 페르 알빈 한손 대표는 사민당의 사회주
의 이데올로기를 일컬어 인민의 집이라고 불렀다. 인민의 집이라는 표현에는 사민당이 계급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이며 계급 간극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입장 전환은 무엇보다도 농민을 겨냥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1920년대
내내 이어진 위기가 농업노동자를 포섭하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전후 강령:** 1944년 스웨덴 사민당은 종전 후의 지향점을 밝힌 전후강령을 발표했다. 사
민당은 국가주도의 산업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완전 고용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과 경제 계획은 반드시 필요했다.

<<생각해 볼 문제>>

1.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에 관해 생각해 보자.

북유럽의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다. 189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
가 진척되었지만 실업과 위생 등 각종의 사회문제가 존재했으며 임금이나 주거 등의 조건에
서 타국에 뒤쳐졌다. 그러나 이후 스웨덴은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을 이루었고, 그 절정기인 1950-70년대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스웨덴은 각종의 사회정책과 완전고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가난한 농업국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고르게 보장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생산의 촉진과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실업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사용되지만, 고용과 재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질병과 재해의 예방, 가족지원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생산을 촉진하는 사회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비생산적 사회비용의 지출이 그에 상응하여 감소했다. 이로써 얻은 성과가 완전고용과 계급 간 격차 해소, 복지국가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첫째로 강력한 국가였다. 16세기부터 강화되었던 중앙정부는 스웨덴의 근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복지 국가 역시 국가가 모든 영역을 최고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전부터의 믿음 위에서 성립했던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독특한 민주주의적 전통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중세부터 신분의회에서 농민이 별개의 신분을 구성했고, 신분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도 했다. 그 안에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영향력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이는 곧 스웨덴 민중이 나름의 민주주의적 전통, 합의와 타협의 성향을 길러왔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스웨덴의 민주주의 전통은 19세기부터 이미 집단 지향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44년간 집권했던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후 사민당이 내세웠던 인민의 집 이데올로기는 계급 간극을 넘어서는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며 특히 농업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분배를 위한 성장에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사민당은 노동계급에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국민적 복지와, 복지에 앞서 고용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다.

스웨덴은 파시즘의 광풍이 불던 1930년대부터 평화로운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어느 학자들은 이러한 발전에 ‘중도(中道)’, ‘근대국가의 모범’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 발전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근대 스웨덴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으로 강한 국가, 사회적 동질성, 민중적 민주주의 전통 등이 언급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며 그 뿌리는 분명 스웨덴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논의해 보자.

복지국가란 세금과 사회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1970년대~80년대에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생산을 촉진하고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미 20세기 초에 틀이 잡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안정도 함께 가져왔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을 휩쓴 파시즘도 스웨덴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계급 격차가 해소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은 타협과 협력의 정신 위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지속시켰다.

그 결과 1980년대 스웨덴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집에 전기가 공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과 냉장고, 진공청

소기와 같은 내구 소비재를 소유했다. 국가와 자치정부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복지를 제공했다. 그에 따라 가정 밖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여 64%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사민당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한 사회’를 선전했다. ‘인민의 집’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고성장 경향이 수그러들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렸다.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세금, 정부 지출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재정 압박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작은 폭이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개편과 삭감 역시 실행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감축도 시도되고 있다.

14장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닐 때

<<내용요약>>

1. 아편전쟁: 중국 근대의 기점

① 배경: 임칙서의 강경조치 - 아편 흡연자 사형론을 지지했던 임칙서가 1839년 흠차대신으로 임명되어 아편 무역의 온상지인 광주에 파견, 아편매매 엄금, 아편의 몰수와 공개 소각.

② 아편전쟁에서의 청조의 패배

- 남경조약, 호문조약 등 불평등조약으로 청조의 권위 실추
- 기독교의 유입, 해운의 흥성 등의 영향으로 태평천국운동 발생

③ 청조의 패배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중화주의적 조공체제 재편

- 18세기 말부터 청조는 노화의 징후, 19세기 경기불황과 내란
- 17세기 이후 지속되었던 동아시아 대외무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 붕괴
- 동아시아국가들의 개항: 청(남경조약), 일본(가나가와조약과 안정5조약), 조선(강화도조약)

- 조공국들의 조공질서에서의 이탈: 류큐왕국은 일본의 오키나와현으로 편입(1879년), 베트남(1884년 청불전쟁이 계기), 조선(1894년 청일전쟁이 계기)

④ 동아시아 국가들의 내정에서의 지각 변동

중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황제지배체제 붕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수립

일본: 1868년 메이지유신, 1889년 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국화

⑤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의 근대적 조약체제, 불평등조약체제[반식민지], 제국주의체제[식민지]로 재편 - 중국은 남경조약을 시작으로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제당하며 점차 반식민지적 상황으로 전락.

2. 중국의 경제

① 개항 당시 중국은 부강한 국가 중 하나:

- 18세기에 중국의 경제는 고도의 상업화 혹은 상품화가 진행: 경제 생산과 인구는 오랫동안 상승국면
- 인구의 폭발적 증가(감자, 고구마 등 새로운 작물 재배 및 산간지역 이주 등)

- 양자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농촌수공업의 등장
- 장거리 무역의 발전에 따른 결제·화폐 시스템 발전(은 유통 및 지방 은행권 발행 등)
- ② 18세기 후반부터 인구 증가로 환경 고갈 및 생태계 파괴
- ③ 19세기 은의 유출 증대와 위기 심화, 경기 불황과 내란 발생
- 가정연간에 발생한 백련교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재정 상태 악화
- ④ 1830년대 아편수입의 본격적 문제화
- 19세기 이후 아편 밀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그 결제수단인 은의 막대한 유출
- 통화 공급 축소, 물가 하락, 농민의 세금 부담 가중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
- 처음에는 팔기군의 군기 문란 등 사회문제로 주목 받았으나 1829년 장원의 상주 이후 은 유출과 관련하여 논의

3. 청일전쟁의 패배: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

<<용어정리>>

○ **아편전쟁:** 1840년~42년에 걸쳐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 영국의 아편을 중국이 소각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아편전쟁이라 불린다. 18세기 내내 은을 흡수하며 무역 우위를 누렸던 중국은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가져와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누적된 무역적자가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편 흡연이 미치는 해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국 정부는 임칙서를 파견해 아편을 금지하고자 했다. 임칙서는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상관에서 아편을 몰수해 소각하는 강경책을 선택했고, 이 조치가 영국의회의의 파병결의를 부추겨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은 청의 일방적인 패배와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의 조인으로 끝났다.

○ **개항:**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대외무역 통제 정책이 서구 열강에 의해 폐지된 사건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3국은 대외 및 대내적 통제를 위해서 특정 항구만 국가 관리 아래 개방해왔다. 그러나 아편전쟁 패배 이후 청이 남경조약을 통해 영국에게 다섯 개 항구를 개방한 뒤, 일본과 조선도 차례차례 서구 열강의 압력을 받아 개항 혹은 개국을 하게 된다.

○ **불평등 조약:** 국제 조약 중 한 측에만 일방적으로 특수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해 대등하지 않은 조약을 의미한다. 18세기 이래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각 국가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중국은 아편전쟁 패배 이후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남경 조약을 맺었다. 관세자주권 상실, 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 등이 주 내용이었다.

○ **18세기 상품 경제:** 18세기에 중국의 경제는 고도의 상업화 혹은 상품화가 진행된 단계에 있었다. 경제 생산과 인구는 모두 오랫동안 상승국면에 있었다. 감자, 고구마 등 새로운 작물 재배나 산간지역 이주 등으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 분업이 이루어져 양자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농촌수공업이 광범위하게 등장했다. 상품화에 따라 장거리 무역이 늘어나면서 은 유통 및 지방 은행권 발행 등 결제 화폐시스템이 발전하였다. 이런 지속적인 경제 팽창은 18세기 후반부터 인구 증가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계에 부딪혔고, 19세기에 들어서 아편이 유입되자 은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에서는 경기 불황과 내란이 발생했다.

○ **은 유통과 아편 수입:** 중국은 16세기부터 유럽과의 무역에서 압도적인 흑자를 기록해왔다. 비단, 도자기, 차 등의 상품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은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켰고, 중국은 풍족한 내수 경제를 누렸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아편이 수입되면서 은의 흐름은 역전

된다. 아편 수입의 폭증은 그만큼의 은 유출을 의미했고, 이 시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고도성장을 시작했다. 은 부족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16세기부터 이어지던 중국의 우위는 추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 **난징 조약:**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1842년 8월 29일 영국과 체결한 조약으로, 청이 난징 함락 직전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중국 최초의 불평등조약. 협정관세를 받아들이는 관세자주권의 포기, 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청조의 권위는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 **태평천국운동:** 아편전쟁 이후 피폐해진 농민들이 제1차 중영전쟁의 패배와 청조의 권위 추락을 계기 삼아 청조를 타도하고 태평천국을 세우기 위해 일으킨 운동. 홍수전이 세운 배상제교는 처음에는 개인의 종교적 구원을 중시했으나, 점차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결국 1851년 배상제교 회원들은 태평천국을 선언하고, 홍수전이 천왕에 즉위했다. 이들은 난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50만 규모의 병력까지 갖추었으나 1864년 수도가 함락되자 급속히 몰락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조의 위기 대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부유한 양자강 유역의 파괴와 2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며 일어난 전쟁. 그 결과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에게 각종 특혜를 인정하였다.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이 조공국 조선을 상실했다는 것은 중화제국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의미였다. 반면 일본은 근대화의 성공 사례로서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재평가 되었다. 허약해진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동아시아와 여타 비유럽 지역의 근대로 진입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자.

동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럽의 영향을 받으며 근대화를 겪었다. 직접 지배를 겪은 지역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이 나뉘고, 식민 지배를 당했던 지역들도 이전의 역사와 당대의 사회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종종 이런 차이는 근대화를 치러낸 각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앙집권적 국가의 틀을 일찌감치 갖추고, 오랜 기간동안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동아시아는 여타 비유럽 지역과는 사뭇 다른 근대화 과정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식민경험의 양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동아시아 3국이 서구 열강에게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불평등 조약과 수탈, 일부 영토 상실 등의 경험이 있지만 식민지가 되진 않았고,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비유럽 지역은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국경선까지 서구열강의 자의적인 분할을 따랐을 정도이다. 이 두 대륙은 유럽과 접촉해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인구 유출과 유입을 겪었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인구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유럽이 세계무역에 뛰어들어 산업혁명의 자극제가 될 교역을 시작할 때부터 관련이 깊었고 이후 유럽의 근대화에 밑거름이 된 원료와 시장을 제공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굴곡을 겪지 않은 지역, 국가는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나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근대화를 진행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서유럽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한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반 예속 상태 빠져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동아시아의 처지가 꺾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도와 서아시아를 제외하면 기존 사회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여전히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 포스트 식민주의적 주변부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인도와 서아시아는 양자 모두 오랜 기간에 걸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와 자원을 바탕으로 나름의 근대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역시 식민지배의 유산인 지역, 종교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이어 벌어지는 중동 전쟁 모두 식민시대의 유산인 셈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들이 독재정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여전히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하에 있다.

2.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중국관과 일본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조선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청나라와 조선이 근대화의 격류 속에서 일본에 의해 추월당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청나라가 경험한 충격은 이전의 아편전쟁, 일본의 대만출병, 청불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청나라는 가장 중요한 조공국인 조선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해왔던 일본을 근대화의 성공사례로 인정해야 했다. 청에서는 일본이 채택한 입헌군주제, 더 나아가 공화제를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개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서구 열강에 의해 이권을 침탈당하던 청과 마찬가지로 조선 역시 각종 국가의 이권 침탈과 함께 일본의 식민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청나라가 진 부담은 2억 량이라는 공전의 배상금과 대만 할양 등 이외에도 열강이 중국을 분할하지 않을까하는 절실한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 조선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의 종주국에서 벗어나 독립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대신 일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조선에서 역시 일본을 근대화의 모범사례로 생각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적 개혁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수구파와 개혁파는 열강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합집산 했고, 청일전쟁 이전부터 조선의 정쟁에 개입해왔던 일본은 승전 이후 조선의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지 16년 만에 청조는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붕괴한다.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구축(驅逐)이라는 한족 민족주의를 내건 혁명파와 청조의 무능함에 수세적으로 혁명을 지지한 개량파가 합작하여 성취한 것이었다. 양자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망국’의 위기감이었다. 실제로 조선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15장 근대의 동아시아적 유통과 중국

<<내용요약>>

1. 중국의 개혁운동과 혁명운동

① 양무운동(33년): 한족 관료들(태평천국에서의 구국을 이룬 중국변 · 이홍장 등)의 ‘자강’과 ‘부강’ 운동 - 강력한 군사력과 각종 근대산업의 육성 추구 - 양무파의 농후한 지역색과 극심한 정치적 간섭이 근대적 공장 운영방식 성공에 한계 초래 - 청일전쟁의 패배로 좌절

② 강유위의 변법파와 손문의 혁명파가 양대 정치세력으로 등장 - 중국 지식인을 양분하며 새로운 정치 공간 형성

가. 변법파: 무술변법을 실시했지만 103일 만에 권좌에서 실각, 청조의 탄압 속에서도 입헌운동 등 개량적 방법 제시

나. 혁명파: 체제전복 주장

2. 도쿄에서의 정치적인 논쟁: 변법파(개량파)와 혁명파의 논전 전개

① 20세기 중국인들의 일본 유학 경향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근대화 모델/ 과거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신 수단으로서 해외 유학 부각, 어학적 이점(일본어 습득 용이)

② 중국의 진로를 위한 고민과 조직 결성 및 잡지

개량파: 강유위와 양계초의 보황회-『신민총보』

혁명파: 손문의 중국혁명동맹회-『민보(民報)』

③ 입헌군주제와 청조 타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 중국 지식인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 귀국 후 1911년 신해혁명의 중요 기반

3. 국내의 혁명정세 고양과 신해혁명

① 청조의 양보: 의화단운동의 실패 후 내외의 정치개혁 요구에 수동적이나마 부응

가. 신정을 통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 약속

나. 한족 신사층 내부에서의 헌정과 의회개설에 대한 높은 요구

다. 1909년에 각 성(省)에 자의국 개설: 선거를 통해 개설된 지방의회 - 지역의 입헌파 신사층들의 조직화와 활력 증진

② 청조의 반동

가. 1911년 5월 ‘황족내각’ 발족: 한족 신사층의 합법적인 정치 참여 좌절

나. ‘철도국유화조치’: 지방 신사층이 주도한 철도이권회수운동에 타격

③ 청조 타도의 움직임: 개량적 입헌파인 지방 신사층도 청조 타도에 동조

④ 1911년 10월 10일 무창봉기: 양자강 이남의 각 성(省)에서 입헌파와 혁명파의 합작으로 독립적인 성정부(省政府) 구성 - 1912년 청조 붕괴, 중화민국 개국

4. 서구적 근대적 지식의 동아시아에서의 유통

① 서구의 사상과 문화 및 제도의 중국적 수용과 변용 과정

체계화된 학제 외에 출판물과 잡지의 확대/ 서구 서적의 번역(일본의 번역어를 참조한 서구 서적의 대량 번역) - 번역어 공유를 통한 근대적 지식의 동아시아에서의 유통

② 주체에 따라 상이한 서구 지식의 수용 양상

사회진화론: 일본에서는 천황주의적 국가론으로 변질/ 중국에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의 개성과 정신을 강조, 사회진화론의 극복과정에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두

<<용어정리>>

○ 양무운동: 중영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을 계기로 서구의 기술과 교육에 주목한 청의 관리

들이 1861년부터 1894년까지 33년간 시도한 개혁운동.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식 군대 창설, 군수 산업을 비롯한 근대적 산업의 발전, 신식 교육 기관 설립 등 광범위한 규모의 서구식 개혁을 도모했다. 나름의 결과를 낳았지만 결국 양무파의 지역색과 부패와 비능률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패했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대비되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다.

○ **무술변법**: 1898년 강유위, 양계초 등의 변법파가 광서제의 지지를 받아 시도한 개혁운동. 변법파는 체제 내에서 개량적이고 물질적인 근대화를 추구한 양무운동이 철저한 서구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서구식 정치제도인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낀 서태후와 수구파의 역쿠데타로 103일 만에 막을 내렸다.

○ **신정**: 양무, 변법 운동의 실패 이후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정부주도의 근대화 시도. 의화단의 난이 진압된 이후 열강의 내정간섭과 내부 요구에 의해 추동되었다. 신정은 과거제의 폐지와 학교제도의 실시, 신식 군대와 경찰의 설립, 입헌과 국회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정치개혁이었으며, 특히 과거제도의 폐지는 해외유학생의 증가를 부추겼다.

○ **과거제 폐지**: 신정 개혁의 결과 1904년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식학제가 반포되었다. 1300여 년간 중국의 관료 배출 시험이자 입신출세의 루트였던 과거제도는 이때부터 고등교육 기관 졸업, 군사학교 진학, 해외유학 등 다양한 길로 대체된다.

○ **개량파와 혁명파**: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변법파, 즉 개량파와 동 시기에 광주봉기를 일으킨 손문 등 혁명파는 청말 새로운 정치공간의 양대 세력이었다. 개량파는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삼았고 혁명파는 청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 내외의 젊은 지식인들은 이들의 논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 **자의국**: 1909년 개설된 중국 최초의 지방의회. 의결기구의 위상을 갖지 못했고 전체 인구의 0.4%만 투표에 참여했으나 각 지역의 입헌파 신사층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1910년 중앙에서는 자의국에 대응하는 자문기구인 자정원이 설치되기도 했다.

○ **신해혁명**: 1911년~1912년 사이에 일어나 중국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시킨 혁명. 1911년 보수적인 황족내각의 철도국유화조치로 입헌파 신사층마저 청에서 돌아섰으며, 드디어 후베이성 우창에서 신군의 무장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곧 다른 성들에 확산되었고 혁명군은 그해 12월 중화민국임시정부 조직대강을 공포해 난징 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 쑨원을 선출했다. 이후 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가 퇴위하고, 참의원에서 위안스카이를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 **염복**: 1900년을 전후해 중국에서 급증한 서양 서적의 주요 번역자 중 한 명이다. 생계를 위해 입학한 북주선정학당에서 근대학문을 습득하고 파견유학생으로 선발,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염복은 당시 군함, 해군학 등 본래 목적이었던 학문 외에도 인문학 서적을 섭렵했다. 귀국 후 그는 해군학교인 북양수사학당에서 가르치면서 토머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evolution and ethics』를 『천연론(天然論)』으로 번역, 출판해 중국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의화단의 난 이후 번역에 전념한 염복은 국부론부터 아이반호까지 광범위한 서양 서적을 번역, 소개하였다.

○ **번역어**: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번역어는 근대적 지식의 유통 양상을 드러내 보여 준다. 중국은 서구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번역어와 함께 경전에서 재해

석한 단어와 일본의 번역어를 함께 활용했다.

○ **사회 진화론**: 진화론은 동아시아에서 사회이론으로서 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사회진화론인데, 특히 일본에서 위력을 떨친 후쿠자와 유키치의 적자생존식의 문명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한 무정부주의적 상호부조론이 더욱 강력한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서구 지식의 수용은 일방적인 이식이 아니라 주체적인 재해석 과정이었던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현재 세계화 과정 속에 이질적 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서구 지식의 수용 양상은 수용 주체에 따라 달랐다. 근대는 분명 서구에서 발원한 것이지만, 그를 수입하는 주체의 상황과 인식에 따라 그 수용방식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 수입된 가장 유력한 사상이었던 사회진화론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 1860년대는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이 유럽 지성계를 지배했다. 그 후 1870년대부터 자연계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도 적용하려는 사회진화론이 등장하여,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는 이른바 제국주의의 시기로, ‘약육강식’을 사회적 진리로 주장하는 사회진화론의 유행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사회진화론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스펜서가 주창한 사회유기체설은 경쟁에 의한 사회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크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천황주의적 국가론으로 변질되었으나 중국에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의 개성과 정신을 강조했고 사회진화론의 극복과정에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두하였다.

중국이 일본과 달리 사회진화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침탈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팽창의 길로 나섰던 일본의 경우는 사회진화론에 내포된 인종주의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다. 이렇듯 각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상이한 문화적 조류를 만날 때 각국의 태도와 수용 방법을 다르게 만든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는 각국의 국민들에게 자국과 타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각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민족주의의 성격에 따라 세계화에 반응하고 있다.

2.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보 유통 현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근대성은 서구에서 발원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사상과 습속, 문화와 제도의 총합을 의미한다. 비 서구사회에서 근대성의 수용과 정착, 변용의 과정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지니며, 그 수용 루트 역시 다양하다. 중국이 서구 근대를 수용하는 데에는 개항장을 통한 직접적인 수입도 있지만, 엘리트들의 유학 역시 커다란 작용을 했다. 과거제도의 폐지로 유교적 소양을 지닌 과거합격자 내지 수험생 신분의 전통적인 엘리트층을 대신하여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체계화된 학제 이외에, 출판물과 잡지의 확대는 근대적 지식을 퍼

트리는 대중교육의 새로운 장이 되었다. 청 말에 발간된 신문과 잡지의 수는 1898년 70여종에서 5년 후에는 250여 종으로 경증 뛰었고, 우편제도의 실시로 북경, 상해 등지 대도시의 신문과 잡지는 지방으로도 유통되었다. 특히 각종 정치이슈의 등장과 여론의 활성화는 이러한 정보의 대중적 유통과 상호 상승작용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번역은 중요한 근대적 지식의 소개자였다. 번역 과정에서 근대적 지식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현지어의 형태로 탈바꿈하여 소개된다. 중국의 서양 사상수입이 일본식 한자를 매개로 하게 된 것은 청 말과 민국 초의 일본유학생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식의 서구어 번역이 중국인에게도 쉽게 이해되었던 것이고, 중국보다 앞서 서구사상을 열심히 수입한 일본에는 중국인이 번역하고자 하는 서양서의 일본어 번역이 이미 상당부분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일본식 한자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식 번역어를 신조한자라고 하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신조한자는 중국경전에 원래 있는 글자를 차용해서 영어에 해당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일본의 역시 막부 말기 빛 메이지 초기에 일본 역시 중국에서 적지 않은 서구문명을 소개하는 한적을 수입하여 서구에 대해 학습했었다. 일본식 번역어에도 이 중국한적의 번역어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응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많았고, 중국한적의 번역어가 중국 땅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일본에서 보편화된 이후 중국으로 역수입된 사례도 많다. 번역어의 문제야말로, 근대적 지식이 동아시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삼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물을 수입하면서 새로운 소통 수단을 또다시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80년대 이후,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한 문화적 교류는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 세 나라가 서로의 고유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16장 근대적 산업화 길

<<내용 요약>>

1. 남경조약과 개항 이후 전통적 수공업경제의 재편

- ① 토포 생산의 비약적 증가 : 견고함과 저렴함, 인도에서 수입한 기계 면사 이용으로 외국의 기계식 면포와의 경쟁력
- ② 비단과 생사 생산의 쇠퇴: 미국의 기계식 견직물과 일본 생사에 밀림.

2. 근대적 경제부문의 수입: 기선과 철도 및 군수공업의 도입(양무파의 부국강병정책)

- ① 근대적 기선회사 설립 및 철도 부설
한계: 전통적인 정크선의 높은 내륙 수운 비중 및 철도 부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약소한 철도의 석탄 등 원자재 운송량 등의 한계
- ② 정치적 영향에 따른 군수산업의 미발전

③ 민족자본의 성장: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 - 외국인이 개항장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자극받은 중국의 토착자본이 근대적 산업에 투여

④ 근대적 산업의 비약적 발전: 1차 대전 시기 유럽 상품의 중국내 경쟁력 약화

3.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① 5.4운동(1919): 중국근현대 사상 최초로 성공한 대중운동

- 배경: 민족자본의 성장과 근대적 산업 발전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및 노동자계급 내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 강화

② 5.30운동(1925):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 반제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1928년 장개석의 남경국민정부 수립 자극

4. 남경국민정부

① 관세자주권 회복과 이에 기반을 둔 수입대체산업화 추진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채택

② 1931년 관세자주권 회복으로 관세율 개정을 통한 중국 산업 발전에의 기여

③ 중국 경제의 성장 도모: 도로 건설, 성영 공장 건설 및 법폐 개혁 등 근대화를 위한 환경의 대정비

5. 일본의 영향: 중국 경제의 근대화에 큰 영향

①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강력한 성장 정책으로 1차대전의 전시호황과 공업국형 산업구조 정비

② 중국에 대한 무력 침공

- 1927년 공황의 본격화와 중국 시장 확보 추구

- 중국의 관세자주권 회복으로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잃은 수 있다는 위기의식

- 일본의 만주 및 화북 점령과 일본 상품의 밀수: 중국의 근대적 산업 발전 저해

③ 중국 근대화에 긍정적인 기여

- 중국에 가장 많은 자본 투자

- 재화방에 면방직공장 설립: 선진적인 기술, 설비, 노사관리로 중국자본기업에 모델 제공

- 동북 3성에 다수의 중공업 공장 건설: 전쟁에 대비할 목적으로 최신식의 중공업건설, 철도투자, 광산개발 등 경제개발정책 전개

6. 중국의 경제적 근대화의 한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인구 대부분이 농경에 종사, 산업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 근대화 부분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근대화 산업의 시작 시기가 너무 늦었다.

7. 중국 경제적 근대화의 의의

- 오늘날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근대화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실험의 연속선상에 있다.

<<용어정리>>

○ **토포**: 중국에서 생산된 토착면포를 일컫는 말. 중국은 이미 명청시대에 유기동력경제로는 최고 수준의 농촌수공업 발전을 시켰다. 개항 이후의 중국에서도 생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토포는 질기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한 기계 면사를 이용하면서 그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외국의 기계식 면포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기선과 철도의 도입**: 중국에 기선과 철도가 도입된 것은 서구자본에 의해서였지만 양무

과 관료들의 적극적 주도 역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기선의 경우 1862년 미국 회사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1873년 이홍장이 운선초상국을 설립하고 미국 기선회사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였다. 철도는 1876년 영국회사가 부설한 상해-오송 구간이 최초였고 역시 이홍장이 당산-천진 구간에 철도를 부설했다. 기선은 개항장간 운송을 주로 담당하면서 내륙 수운의 전통적인 범선과 공존 성장했으나 철도는 외세의 국내 침투를 조장한다는 인식 때문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 **민족자본의 황금기:** 제1차 세계대전 시기를 두고 중국 민족자본의 황금기라고 한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개항장의 외국인 공장 설립이 합법화되면서 근대식 공장이 설립된다. 중국 토착자본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 공장에 투입되었으며, 곧 중국민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꾸준히 성장하던 중국 기업은 1914년부터 1922년 유럽기업들이 전쟁수요를 감당하는 사이 수가 크게 늘고 이익률도 유례없이 높아졌다. 이 시기 급격했던 운송비의 상승 또한 중국 상품에게 이롭게 작용했다.

○ **5·4운동:** 베르사유 강화회의의 내용에 반발한 중국 민중이 1919년 5월 4일 일으킨 애국 운동이다. 청년, 학생이 주축이 되었으며 일부 상인과 노동자들까지 참여하여 매국노 파면과 강화조약 조인 거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미해결된 사안을 다룬 워싱턴 회의는 중국에 대한 9개국 조약을 통해 중국의 주권, 영토를 보장했다. 특히 관세자주권의 인정은 중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주요 조건이었다.

○ **5·30 운동:** 1925년 일어난 대규모 노동자 시위이다. 상해의 일본 면방직회사인 내외면사창 파업에서 피살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고, 이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진압경찰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일어나 전국적인 반제운동이 불붙었다. 이 시위는 당시 광주에 자리잡고 있던 국공합작의 혁명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장개석의 난징국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 **난징국민정부:** 1928-37년 사이 난징에 수도를 두고 장개석의 국민당에 의해 성립, 유지되었던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1937년 중일 전면전의 발발로 전시수도인 사천성 중경으로 옮겨간다. 군벌 및 합작 결렬 이후에는 공산당 세력과 일본의 침략에 동시에 맞서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국민당 정부의 경제 성과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관세자주권을 회복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을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부가 산업진흥 3개년 계획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 경제성장은 민간자본의 자생적 발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만 관세 정책을 비롯하여 은행, 화폐, 도로 등 정부주도의 거시적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관세 자주권:** 수입과 수출에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시기에 중국은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관세자주권을 빼앗겼으나, 워싱턴 조약(1930)을 계기로 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자주권 회복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이 이루어진 뒤, 붕괴된 북경정부 대신 난징국민정부가 관세회의의 당사자로 나섰다. 열강 중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미국으로, 중국에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영국과 일본은 미국의 친중국적 태도를 따라 협상에 동의했다. 1931년 약 90여년 만에 관세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중국은 관세개정을 단행, 소비재 관세 인상과 생산재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다.

○ **만주사변:** 1931년 일본이 조작한 폭파사건을 구실로 만주를 무단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 공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관세자주권을 되찾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일본은 결국 무력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은 일본 자본주의에게는 대미무

역의 적자를 상쇄해 주는 수출시장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만주를 사실상 장악하고 화북지역의 무장을 중일공동방위 명분으로 해제한 뒤 관동군 주도로 조직적인 밀수를 벌여 남경국민정부의 관세정책을 무력화시켰다. 밀수된 일본상품이 중국의 근대적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물론이다.

○ **재화방:** 1913년에 일본이 천진, 상해에 설립한 면방직공장이다. 처음 6개 공장으로 시작된 재화방은 1차대전의 호황기에 8개 공장을 증설해 재화방 생산량이 일본산 면사 수입량을 능가하게 된다. 재화방은 중국자본의 공장들과 경쟁하면서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노자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한편, 선진적 기술, 설비, 노사관리를 통해 중국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 **열린 경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깊이 연관된 열린 경제로 전환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강제 개항으로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되고 가격 면에서 운송과 통신비용이 감소하면서 중국 핵심지역의 상품가격이 외부 시장의 영향에 노출된다. 1920년대 말 중국경제의 개방도는 199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에 달한다.

<<생각해 보기>>

1. 세계화 시대에 약소국의 전통적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의 경제지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는 이전과 다른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소규모 전통 산업의 존속을 위협하기도 한다. 거대한 자본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초국적 기업은 각국의 토착 산업을 대체하거나 종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착 산업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거대 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의 전통적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근대 초기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국의 토포가 영국의 기계제 면포와의 경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자. 남경조약으로 영국의 기계제 면포가 중국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무역량은 이내 감소했고,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 이후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1870~80년대에는 오히려 중국의 수출량이 늘어났다. 이는 이미 유기동력경제로서 최고 단계에 도달한 중국 양자강 하류의 면직업자들이 인도의 기계 면사를 수입해 영국의 기계제 면포에 비해 저렴하고 질 좋은 수제 면포를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계면사로 짠 이른바 신토포(新土布)는 이전의 면사 방식에 들었던 수공을 그만큼 절약함으로써 개항과 기계 면사의 도입 이전보다 토포의 생산을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전통적인 산업영역이 근대적 요소를 도입하여 변모하고 발전했던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견직업은 이전의 지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다. 비단과 생사는 수세기 동안 동서무역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으며, 개항 이후도 상당기간 그러했다. 산업혁명을 선도한 면방직업과 달리 생사의 생산 공정은 기계화하기 힘들었고, 비단 직조 역시 전 면적으로 기계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880년대부터 미국의 기계식 견직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생사수출시장 지형이 달라졌다. 기계식 비단 직조에 필요한 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생사보다는 직조과정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굵기가 균일한 생사였다. 개별 농가에서

수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중국의 제사농가로서는 이러한 균질의 생사 생산은 힘들었다. 양자강 하류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중국 생사는 여전히 고급레이스 등을 생산하는 프랑스 시장 등지에 수출되었지만 이미 주류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나일론의 발명으로 나일론 스타킹이 실크 스타킹을 대체하면서 생사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아 1920년대 이후에는 생사와 비단 모두 중국의 수출품목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생사 생산 부문에서 전통을 새로운 기술과 적절하게 혼합해낸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의 생사 산업은 농촌 출신의 여공을 모아 대규모의 공장에서 엄격한 생산관리를 실시하여 생산했다. 이렇듯 전통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육성될 수 있다.

2.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가 한반도의 근대화에 미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자.

일본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비서구권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근대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기록된 질곡의 태반은 일본의 점령과 식민지화에서 연원한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남북 분단의 상황과도 아주 무관하지 않다. 분단은 북한과 남한의 정치지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특히 남한의 경우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은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식민지 시절의 과대국가기구가 온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권위주의적인 관료기구와 강력한 경찰, 군대가 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치 근대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반공주의는 정치지형을 협소하게 만들었고 정치 문화에서 논쟁과 타협이 쉽게 정착되기 어렵도록 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는 논쟁거리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로서 수탈해 근대화를 가로막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의 토지를 비롯해 각종 자원을 수탈하고 인적 자원을 강제로 차출했으며 일본 자본의 활로를 찾아 조선을 침식했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그러진 형태로나마 발전했던 것처럼, 조선 역시 근대적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1920년대 이후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조선인 자본이 미약하나마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에서 건너와 강제로 이식된 서구식 산업 발전 모델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일본의 목적은 결국 조선을 통해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었고, 조선 나름의 자주적 산업화는 폭력적인 일본 지배 아래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에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격류 안에서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전시산업체제로 전환시켜 빈사 직전까지 쥐어짜냈다는 점은 당시 조선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고 조선인 자본이 성장했다는 것만으로 덮어질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일본인들을 따라 쏟아져 들어온 서구식 도시 문화의 이식과 떼어놓을 수 없다. 조선의 전통문화는 화려한 수입문물에 빛이 바랬고, 수도 서울은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남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양육, 전기 가로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화의 세례를 받았다. 부유층 젊은이들과 인텔리들을 중심으로 모던 길, 모던 보이로 상징되는 풍습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다. 이들은 서구 문물과 사상에 영향을 받아 조선의 근대화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집단이기도 했지만 패배주의와 데카당스한 생활에 빠져 들어가 당대 조선의 암울한 전망을 스스로 드러내는 집단이기도 했다.

17장 근대 일본 정치의 전개와 특색

<<내용 정리>>

1.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통일

- ① 배경: 19세기 서양 선박의 빈번한 출현과 바쿠후(막부) 및 한(번)의 위기감 고조
아편전쟁에서의 청의 패배
- ② 메이지유신(1868): 사쓰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바쿠후 세력의 궁정 쿠데타, 천황의 이름으로 바쿠후 해체
- ③ 존왕양이의 명분으로 서양화 추구
메이지유신 주도자들은 '존왕양이(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낸다)'를 내걸었으나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철저한 서양화 추구
일본의 독립과 부국강병 추구 - 서양과 같은 '국민국가' 수립을 강력히 추진.
- ④ 일본 열도 통일: 메이지 정부의 최대 과제- 1871년 한을 철폐하고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현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징세권 행사.

2. 헌법 제정을 둘러싼 각축

- ① 대표제 정치의 도입 필요성 - 메이지 정부는 유럽식 국민국가를 모델로 설정, 제한적으로라도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음.
- ② '공의의 제도화' 시도:
 - 사쓰마, 조슈와 같은 한들은 도쿠가와 시대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제가 동요하는 틈을 타 바쿠후가 정치를 독단하는 것에 문제 제기
 - 주요 한들의 의견이 공의, 즉 공론임을 주장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바쿠후는 기존의 정치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공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천황의 권위에 의지하여 '공의의 제도화'에 나섬
 - 1864년 이후 주요 한들을 모아 일종의 회의제를 만들어 새로운 권력 기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 지속
 - 궁정쿠데타로 집권한 사쓰마, 조슈도 공의의 제도화를 받아들임.
- ③ 자유민권운동의 전개: 메이지 유신 이후 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형성된 각 정치 세력들이 공의의 담당자를 자임 - 메이지 정부 공격(공의를 무시하고 일부 인사들이 정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속한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 요구
- ④ 이토와 오키마의 권력투쟁
 -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 이토 히로부미와 오키마 시게노부
 - 메이지 14년의 정변: 오키마는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이토는 천황을 움직여 오키마를 쫓아냄
- ⑤ 이토의 독단적인 헌법 제정 준비: '공의의 제도화'인 헌법 제정을 가능한 공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
 - 오키마 실각 후 위기에 빠진 메이지 정부는 10년 후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한다는 조칙 발표. 이후 헌법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
 - 이토 히로부미는 제도취조국을 설치하고 헌법 기초 과정을 총괄: 헌법기초에 민간 정치세

력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의 간섭 배제.

3. 메이지 헌법의 특징

- ①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공포 - 이에 의해 1890년 제 1회 총선거 실시, 의회 구성.
- ② 메이지 헌법의 내용과 특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황에게 있음
 - 천황은 입법권, 육해통수권, 선전 포고 및 강화권, 조약 체결권 등 막대한 권력 보유
 - 그러나 천황은 일본을 통치하지 않고 관망 또는 조정하는 데 그침
 - 천황은 정책 결정에 거의 간여하지 않고 정책 결정은 원로 그룹과 내각, 그리고 의회 사이에 이루어짐.
 -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 기구는 '할거 체제'(원로, 관료, 천황 측근)라고 할 만큼 분절적: 권력 내부에는 강력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4. 근대 일본 정당 정치의 전개와 특색

- ① 1, 2차 호헌운동을 거쳐 정당 내각제, 의원 내각제 실시
- ② 1927년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제도 실시, 언론과 출판 활성화
 - 일본의 정치는 원로, 관료, 천황 측근의 손에서 벗어나 내각, 의회, 언론, 대중에 의해 움직여지는 듯 보임
- ③ 세계 대공황을 전후로 한 불경기와 군부의 대두, 그리고 반동 - 근대 일본 정당들 쇠퇴

5. 일본 근대 정치의 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의의 제도화 과정

19세기 중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공의에 대한 공감대

(근대 초기 일본의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은 의회 설치 요구. 메이지 정부도 마찬가지)

-> 의회설치는 공의의 제도화의 최종적 형태

<<용어정리>>

○ **메이지유신**: 1868년 교토에서 일어난 반바쿠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와 그 이후의 왕정복고 및 개혁을 통칭하는 말이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에 의해 도쿠가와 바쿠후의 쇄국정책이 붕괴하자, 이에 대한 불안으로 민심이 동요했다. 사쓰마와 조슈 한을 중심으로 한 반바쿠후 세력은 동요를 틈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결과 사무라이 정권이 붕괴하고 메이지 천황을 내세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다. 이들은 서양화 정책과 징병제, 의무교육 및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했고, 전신, 우편제도와 함께 철도 건설을 시작했다.

○ **헌법 제정**: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은 일본 최초의 헌법으로 메이지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되어 메이지헌법이라고 불린다. 메이지유신의 명분인 공의정부의 실현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던 중, 1874년 정한론분쟁으로 사임한 관료들이 천황에게 민선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875년에 헌법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다. 81년 오키마 시게노부가 의원내각제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이름을 빌어 10년 기한을 두고 헌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민권운동세력의 기대와 달리, 헌법 제정은 프로이센에서 헌법의 대강을 익혀 돌아온 이토 히로부미의 카리스마 아래 주도되었다. 이토는 1883년 제도취조국을 궁에 설치해 헌법기초작업을 장악하는 한편, 내각을 서구식으로 개편하고 이 중 추밀원에서 천황의 입회 하에 헌법을 심사했다. 민간 공의가 배제된 채 제정된 헌법에 따라 1890년 총선거가 실행되었고, 일본 최초의 의회

가 구성되었다. 비서구권 국가로는 터키 이후 두 번째였다.

○ **자유민권운동:** 유럽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아 사무라이, 농민, 지식인 등이 벌였던 시민운동. 19세기 들어 사무라이와 농촌상층부인 호농층, 지식인, 언론인들이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정치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메이지정부의 수립 이후, 공의의 제도화를 위해 의회를 설립하고 불평등계약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정치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은 자유민권운동의 산물이며, 1880년대 이후 분열과 급진화로 쇠락했지만 일본 근대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다이쇼 데모크라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운동. 1913년 원로그룹의 전횡에 항의하고, 정당내각제를 요구하는 제1차 호헌운동이 일어났다. 이어 1918년 ‘쌀소동’이 벌어졌으며, 원로그룹은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정우당 총재인 하라 타케시를 총리로 임명했다. 1921년 하라가 암살되고 정당내각제의 실현 역시 미뤄지는 듯 했으나, 1925년 제2차 호헌운동이 벌어지고 호헌삼파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정당내각제가 실시되었다. 1927년 성인남성의 보통선거권이 인정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정점에 달했다.

○ **공의의 제도화:** 메이지유신을 포함한 일본 근대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 중 하나. 바쿠후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바쿠후의 권력독점 대신 천하의 공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이묘회의체, 즉 열번회의가 공의기구로 제시되었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한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정당으로 이루어진 의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뀐다.

<<생각해 보기>>

1. 일본 근대 헌법상의 천황의 위상과 현재 헌법상의 천황의 위상을 논의해 보자.

메이지 헌법, 즉 대일본제국헌법은 국민이 아니라 천황을 주권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 일본국 헌법을 만들고 나서야 주권재민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천황은 입법권, 육해군 통수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조약체결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다 의회의 소집과 폐회, 중의원 해산권 및 총리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메이지 헌법 시대의 천황은 제도상으로는 명실 공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 원수였다.

그러나 천황은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정치 핵심인물들은 천황이 정치에 깊이 간여하는 것을 꺼렸으며, 천황 자신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를 택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원로그룹에 의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천황의 형식적인 승인을 얻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원로그룹과 천황 모두 천황이 일본 근대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징이라는 점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천황은 메이지 헌법이 규정한 대로 신성해야 했으며 따라서 현실정치의 승패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했다.

이에 비해 일본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천황의 지위가 국민의 총의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정한다. 물론 천황이 신성하다고 규정하지도 않으며, 이전에 천황이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천황은 의례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형식적인 인증과 공포를 하는 이외의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천황이 국가 원수이자 나라의 상징이라고 공표했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춘 천황을 과연 국가원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이다. 이미 메이지 시대에도 천황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천황은 메이

지 시대의 천황보다도 훨씬 제한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 일본과 중국의 의회 개설 과정과 그 역할에 대해 비교해 보자.

1868년 메이지유신 이전 일본은 바쿠후와 270여개의 한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내외 위기에 조용하여 바쿠후의 권력독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권력참여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바쿠후의 정치행태를 ‘막사’라고 비판하고, 그 대신 ‘천하의 공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쿠후에게 단순히 공의를 대변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내에 공의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공의기구란 다이묘회의체인 열번회의를 의미했다. 다이묘 이외의 사무라이, 나아가서는 평민계층까지 참여하는 회의체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로 천황 밑에 중요 다이묘로 구성되는 회의기구를 발족시킨다는 것이었다. 1867년 5월 천황 앞에서 개최된 참예회의는 바로 이 열번회의가 최초로 실현된 것이다. 또 마지막 쇼군 토쿠가와 요시노부는 1867년 쿠데타를 당하기 직전에 대정봉환을 상표하는데, 그 내용은 바쿠후라는 정치기구를 해체하고 열번회의를 교토에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바쿠후는 열번회의 구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메이지정부는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열되어 있는 일본을 통일해야 했다. 1871년, 메이지정부는 한을 철폐하고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현을 설치하는 폐번치현을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유럽식 국민국가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폭넓은 계층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었다. 메이지유신의 시작은 공의여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공의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라는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났다. 메이지정부도 헌법제정과 의회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려고 했고, 그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 그는 천황의 직속 기구인 궁내정에 취임하여 민간의 공의를 배제한 채 헌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1889년 2월 11일 마침내 대일본제국헌법, 통칭 메이지헌법이 공포되었고 헌법에 따라 이듬해 총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어 의회가 구성되었다. 근대초기 일본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은 의회설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누구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이는 메이지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중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공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의회설치는 공의제도화의 최종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만청정부는 의화단운동의 실패 후 내외의 정치개혁 요구에 수동적이거나 부응했다. 청조가 자구책으로 실시한 근대적 개혁인 신정에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1906년에는 만주족 왕족과 정부 고관으로 구성된 헌정고찰단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지에 파견되었고, 과거라는 전통적인 정치 참여기제를 상실한 지방의 신사층은 의회 개설을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으로 생각하고 각지에서 헌정과 의회개설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제 바야흐로 헌정과 의회 개설의 주장은 무술변법에서처럼 젊은 이상주의적 급진주의자들만의 구호가 아니라, 기득권층 내부, 적어도 한족 신사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청 정부는 1908년에 입헌계획을 선포하였다. 한족 신사층의 기대가 높아가는 가운데, 10월 14일과 15일 광서제와 서태후가 연이어 사망하고, 3살의 어린 선통제가 즉위하였다. 이듬해인 1909년에는 비록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위상이기는 했지만, 각 성에서 선거가 치러져 지방의회격인 자의국이 개설되었다. 자의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170만 유권자에 불과했으나 자

의국 개설과 의회 활동은 각 지역의 입헌과 신사층의 조직화와 활력을 크게 증진시켰다. 1910년에는 중앙국회에 해당하는 자문기구인 자정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부푼 꿈을 안은 지방 입헌과 신사층의 활동이 자의국을 정점으로 활성화되고 있을 때, 이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했다. 1911년 5월에 책임내각이 성립했는데, 13명의 국무대신 중 9명이 만주왕족으로 유력한 한족관료들을 배제한 수구적인 조각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른바 황족내각으로 불리는 이 내각은 한족 신사층의 합법적인 정치 참여의 꿈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5월 5일에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철도 국유화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치는 결국 신식 군대와 자의국을 중심으로 무장봉기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각 성에서 독립정부가 속속 생겨났고, 결국 1912년 선통제의 퇴위로 청조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탄생했다.

18장 ‘국민’의 창출

<<내용정리>>

1. ‘국민’의 창출: 근대국가의 특징

- ① 국민: 국가에 일체감을 갖고 국가의 일, 즉 정치에 참여하려는 지향을 갖는 존재.
 - 국가에 대해 일체감을 가질 뿐 아니라 같은 국민끼리 일체감을 가지며, 타 국민과는 강한 구별 의식을 갖는 존재.
 - 이런 점에서 근대국가를 국민국가라고도 함.
- ② 신분제 철폐: 국민 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이질성을 최소화할 출발점

2. 신분제 폐지

- ① 사무라이: 기존의 지배층으로 메이지유신 주도,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존속
- ② 신분제도의 정비: 모든 사람을 사족과 평민으로 분류.
 - 1869년 메이지 정부는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사무라이 계층을 사와 졸로 나누고, 나머지 피지배 계급은 모두 평민으로 했음. 1872년에는 하층 사무라이인 졸도 평민에 편입.
 - 사족들의 특권 향유는 여전: 특히 국가로부터 받는 봉록이 대표적인 예.
 - 1876년의 질록처분: 메이지 정부는 사족들의 봉록에 대해 과세를 선언하고 봉록 대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줌
 - 사족층의 경제적 특권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 크게 줄어듦
 - 세습 재산이 없어진 사족들은 토지 매입, 기업 투자 등 새로운 경제 행위에 투신. 혹은 관료, 교육자, 언론인 등 전문직에 종사.
 - 많은 사족들이 농민이나 도시 하층민으로 몰락.
 - 시각적으로 신분을 구별 짓는 제도들 폐지: 신분에 따른 여행, 복장, 헤어스타일, 직업 규제를 철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사무라이의 권한도 폐지.

3. 징병제와 의무교육 실시

- ① 1873년 징병제 성립(조슈 한 출신 지도자들의 추진)
 - 사무라이를 비롯한 평민층의 반발에 부딪힘: 징병제에 반대하는 폭동이 1873-1874년에 16차례나 일어났음.
 - 징병제의 확립: 1877년 발생한 대규모 사무라이 반란(서남전쟁)을 징병제로 구성된 평민

군대가 잘 진압하여 정병 군대의 위신 확립

- 이후 군대는 각 계층의 젊은이들을 모아 국민으로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

② 의무교육: 1872년 메이지정부의 학교령 발표 - 4년제 의무교육 시작

근대국가가 국민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 국민 상호 간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정치 의식과 역사 의식의 공유 필요 -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표준어), 대부분 국민의 문자해독성 요구.

4.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침투

① 천황: 근대국가를 만들고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강력한 상징물

② 천황의 전국 순행 - 천황을 국민에게 각인시킴.

③ 교육칙어 반포 (1890년 10월) - 일본 신화에 나오는 국가관과 천황 주권을 선언, 천황의 신성성 강조 - 천황에게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

④ 성대한 헌법 반포식: 천황이 근대화, 서구화, 문명개화의 선도자라는 의식 주입

⑤ 끊임없는 이벤트: 황실 은혼식, 황태자 결혼식, 메이지 천황 장례식, 메이지 신궁 건설 - 국민과 천황의 일체감을 높이고 유지하고자 함.

5. 정보 네트워크의 변화: 정치 정보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 확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정보, 특히 정치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것을 장악하려는 네트워크의 형성, 미디어의 발달

① 18세기 말부터 제정, 대외 위기의식 감지 - 각 정치, 사회세력의 적극적 정보 수집 계기

② 19세기 정치 변혁의 조짐 - 정치 정보에 대한 장악력 중요해짐

③ 19세기 중엽 이후 공론 정치의 형성: 일본 전역에서 활발해진 정치 정보의 유통에 기반하여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

<<용어정리>>

○ **근대국가와 국민**: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등장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국가 제도의 한 형태인 근대국가는 국민국가라고도 불린다. 국민이란 전근대국가의 피지배층과 달리 국가에 일체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 국민은 국가 뿐 아니라 같은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며, 이를 위해서 전근대사회에서와 달리 신분 격차 등의 이질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전근대 일본사회의 신분질서(사무라이-초닌-하쿠쇼) 역시 근대 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점차 지양되었다.

○ **신분제 폐지**: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의 신분제도는 사족과 평민으로 단순해진다. 지배층인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던 메이지유신은 사족의 특권을 유습으로 남겼으나, 이후 사족의 특권 역시 점차 폐지되었다. 1876년 질료처분으로 사족의 경제적 특권이 폐지되었으며, 이 외에도 여행, 복장, 머리모양, 직업 규제 및 검을 찌를 수 있는 특권이 폐지되었다.

○ **징병제**: 일본에서는 1873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무사정권시대에는 병역이 사무라이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그러나 1820년대부터 메이지유신 지도자들이 징병제를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추진해왔다. 징병제 실시는 사무라이 뿐만 아니라 평민층에게도 광범위한 불만을 샀으나 유신정부는 이를 억압하였고, 이후 군대는 천황과 국민을 잇는 매개체로서의 이미지를 얻어 열렬한 지지를 받기에 이른다.

○ **의무교육**: 근대국가가 국민을 창출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근대국가는 국민간의 소통과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했다. 일본의 의무교육은 1872년 메이지정부가 발표한 학교령으로부터 시작된다. 4년제 의무교육을 명시한 학교령은 교육세와 아동노동력의 상실 때문에 국민의 반발을 샀으나, 메이지정부는 강제와 설득을 동시에 활용해 의무교육제도를 정착시켰다. 1905년, 일본의 취학률은 남녀 모두 90%를 넘어섰다.

○ **천황의 순행:** 천황이 전국 각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방법이다. 메이지유신 이전에 천황은 실질적인 권력 부재는 물론이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메이지유신의 지도자들은 천황을 새로운 일본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황의 위엄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다. 서양식 의상을 입고 기차를 통해 일본을 누비는 근대적인 천황의 순행은 이를 보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일본국민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천황의 행차에 게양되었던 히노마루와 울려 퍼졌던 키미가요가 각각 국기와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 **교육칙어:** 1890년 10월에 반포된 ‘교육에 관련된 천황의 말씀’이다. 천황에게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국민된 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천황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으며, 193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의 소학교에서 이를 봉독하고 암송하게 하였다. 교육칙어는 일본신화에 나오는 국가관과 천황주권을 선언하며,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어진영:** 천황의 사진을 의미한다. 천황은 이 사진에서 전통적인 복식에서 벗어나 단발머리에 카이저수염을 기르고 서양식 군복에 칼을 차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어진영을 배부한 뒤, 어진영에 대한 경례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숙직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련 의식을 갖춰나갔다.

○ **메쓰케:** 바쿠후의 대표적인 정부기관이다. 바쿠후의 역인을 감시하고 그 비리를 규찰하는 기관이었다. 이외에도 바쿠후나 쇼군 개인의 정보수집기관이 있었다.

○ **풍설서:** 일반무사나 호농, 호상 등이 수집한 정치정보를 필사, 전사한 서류를 말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편지 등의 형태로 전달되어 온 정보를 모아 축적하고 회람했다. 이를 통해 아편전쟁이나 페리 내항 등의 정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공론을 형성시켰다. 신문이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제1의 요인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기>>

1. 대한제국 시기 근대국가 창출과 관련하여 ‘전통적’ 요소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근대 일본과 비교해 보자.

근대에는 ‘국민’이 창출되었다. 국민이란 전근대국가의 백성과는 달리 국가에 일체감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지향을 갖는 존재이자 타 국민과는 강한 구별의식을 갖는 존재이다. 국민끼리 강한 일체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분제를 철폐해 국민들을 동질하게 만들어야 했고, 의무교육과 군대를 통해 사람들을 국민으로 훈육해내야 했다. 이를 위해서 근대국가들은 국기와 국가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고안해 냈다. 개인들을 국민으로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상징체계는 전통적인 요소를 근대적인 제도 안으로 흡수하면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신분제 폐지는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1869년 메이지정부는 종래 지배층인 사무라이를 사족으로, 그 외의 피지배층을 평민으로 나누었다. 사족은 국가로부터 봉록을 받는 등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876년 질료처분을 계기로 사족의 경제적 특권은

사라졌으며, 시각적으로 신분을 구별 짓는 제도들도 폐지되었다. 일본의 징병제는 1873년에 성립되었다. 초기의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상을 획득한 징병군대는 각 계층의 젊은이를 국민으로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1972년부터 4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제도의 성공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1890년대의 취학률이 90%를 넘어설 정도였다.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징체계로 천황을 들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은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으로서 등장했다. 1869년 교토에서 도쿄로 천도한 이후 천황은 전국을 순행하며 일본의 상징으로서 자신을 부각시켰다. 메이지정부는 전통적 제도의 산물이었던 천황을 교육직어의 반포나 어진영 게시, 헌법반포식, 황실 관련 행사 등 근대적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백성은 ‘일본국민’으로 변해 갔다.

이에 비해 대한제국은 근대적 개혁 과정에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감당해야 했고, 결국은 근대화 과정을 미처 완수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대한제국 시기의 개혁은 근대국가로의 이행 과정을 일부나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갑오개혁의 경우, 앞서 지적한 근대국가와 국민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과 마찬가지로, 갑오개혁 역시 지배층 내의 급진파가 정부를 이끌면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1894년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한제국의 신분제는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친 갑오개혁은 신분제도를 폐지해 국민을 동질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교육의 보급과 군대제도의 개편 등 국민의 형성에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갑오개혁의 영향은 정치, 경제적 변화 이외에도 생활풍습과 사고방식의 전환에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내용 면에서는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지배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개혁을 주도한 세력이 일본의 개입을 틈타 집권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의 식민화를 목표로 삼은 일본의 감시 아래 진행된 개혁은 주체적이기 어려웠다. 개화파는 친일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으며, 사실상 상당수의 개화파 요인들이 근대적 개혁과 서양화, 그리고 친일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봉건과 근대의 갈등이 애국과 매국의 갈등과 겹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요소를 근대국가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통을 폐지해야만 할 봉건 유습으로 보았고, 주체적으로 전통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은 근대화를 외세의 침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2. 오늘날 국민 의식을 주입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본의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 의식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군대제도가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시킨다. 근대국가들은 이를 보통 과거의 전통에서 찾아온다.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것이 마치 지금의 온 국민과 관련되는 것인 양 새롭게 포장하여 내놓은 것이다. 이른 바 ‘전통의 발명’이다. 근대화시기에 각국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국의 국민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역사를 겪은 집단이라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와 국기 등 일상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국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다양한 상징물들이 배치된다.

근대일본에게는 이와 관련해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천황이다. 메이지유신 이전까지는 존재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천황은 메이지지도자들에 의해 새로운 일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메이지정부는 서구복장을 입은 천황이 기차를 타고 일본 각지를 순행하도록 해서 천황을 일본의 상징으로 만드는 동시에 천황을 만난 사람들을 일본국민으로 호명하고자 했다. 천황의 행차에 사용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각각 국기와 국가가 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천황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1890년 10월 반포된 교육칙어(敎育勅語) 암송과 천황의 사진인 어진영의 배포였다. 또한 정부와 황실은 개화된 일본의 상징인 천황과 그 가족을 헌법반포식을 필두로 한 각종 행사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시켜 국민과 천황의 일체감을 높이고 유지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기념우표, 기념엽서, 라디오방송 등 여기에 동원된 수단은 가짓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국민의례를 통해 국기와 국가가 일상적으로 각인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과 끝에 애국가가 방송되는 것도 역시 상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일본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상징물들의 역할이 국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유지한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는 동질하다

19장 근대 일본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변화

<<내용정리>>

1.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경제의 특징

- ① 지속적인 성장: 메이지 유신 후 불과 6년만인 1874년 무렵부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1879년까지 계속됨
- ② 높은 경제성장률: 미국과 더불어 5%대의 높은 성장률 기록(비교: 19세기 후반 전 세계 공업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 대)
- ③ 정부의 경제성장 주도
 - 산업 계획, 기술 도입, 자금 조달, 산업 배분, 사업자 선정, 상품의 해외 판매와 은행 설립 주도
 - ‘모범공장’이라는 국영공장을 다양한 분야에 설립하여 운영
 - 경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 ④ 전매제:
 - 정부의 경제적 주도가 일본 사회에 자리 잡게 된 요인
 - 도쿠가와 시대, 특히 바쿠후와 한 권력이 실시한 제도(생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한이 독점)
- ⑤ 경제 성장과정에서 정부는 몇몇 대상인,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
: 거대 상인 및 기업들에게 국영공장이나 광산 등을 불허해 주고 거액의 보조금 지원(미쓰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거대 정산 형성)
- ⑥ 단기간 내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성공: 근대적 경제성장과 국민경제 수립에 결정적 역할
가. 1869년 도쿄-요코하마 통신선 개통
나. 1871년 우편제도 실시
다. 1877년 도쿄-요코하마 전화 개통
라. 1890년대부터 개인 전화 설치
마. 철도의 비약적인 성장: 수송비용 절감 - 섬유 공업과 광업 발달 촉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자본과 사기업도 철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듦.

⑦ 농촌의 역할:

- 정부와 함께 농업 생산력 향상에 주력하여 도시 지역에 저렴한 식량 제공
- 차남 이하의 아들과 딸은 도시로 진출하여 저임금 노동력 제공. 군병력 제공

⑧ 여성의 역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일본의 산업혁명과 수출을 견인한 제사, 면직, 견직업 등 직물공업 부문의 발전 이룩

2. 근대 일본 재정의 특징

① 근대 일본의 재정 수입: 주로 지조에 의존/ 산업발달과 더불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의 비중도 늘어남/ 공채 발행이 재정 확보의 주요 수단.

② 재정 지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이 큼.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세출(식산흥업비 - 직접적인 자본 구제, 법인소득세의 감면, 중요 산업에 대한 면세 조치 등)

3. 이에(家)와 무라(村)의 변모

① 이에: 도쿠가와 시대 가족의 형태

- 도쿠가와 중기 이후 장자 단독 상속제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차남 이하의 자식들은 다른 집에 양자로 가거나 사무라이 가에 고용인으로 들어감
- 근대화 과정에서 이들 농촌 잉여인구는 도시 노동자로 전환
- 근대 일본의 가족제도: 1896년 호주제 확립(메이지 헌법)/

1947년 호주제 폐지, 균분상속제 도입(미군정하에서 민법 개정)

② 무라

가. 도쿠가와 시대: 강한 공동체적 성격 보유, 무라를 지도하는 농민(촌역인)이 촌락 행정 담당, 무라 단위로 과세. 입회지(공용산림), 강(공동의 종교 조직 또는 금융 조직)

나.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군정의 농지 개혁방침에 따라 무라의 폐쇄성과 공동체성 크게 약화

<<용어정리>>

○ **전매제**: 도쿠가와 중기 이후 바쿠후와 한들의 재정위기 극복수단이였다. 재정의 증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지조를 올려 받는 것이지만, 바쿠후는 토지 검사에 드는 비용과 농민 반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조 증징 대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독점해서 유통시켰다.

○ **정상**: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몇몇 대상인과 대기업을 일컫는다. 이들 가문이나 기업은 정부의 특정세력과 연관되어 크게 성장했다.

○ **철도 건설**: 메이지정부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단기간 내에 정비했는데, 철도 건설은 1872년 도쿄-요코하마 구간이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철도 건설과정에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자본과 사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철도투자 붐은 직물업, 광산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형성시켜 일본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에 이바지했다.

○ **여성 노동력**: 여성 노동력은 일본 산업혁명과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출 주력 산업이었던 제사, 면직, 견직업 등의 직물공업분야에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감수하는 여성노동력이 4/5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 **지조**: 근대일본재정의 세입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토지세이다. 산업 발달의 결과 지조는 총세입의 35%까지 감소했으나, 공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이었다.

○ **식산홍업비**: 근대일본재정에서 군사비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출 부문이다.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세출이며, 식산홍업정책의 예산과 직접적 자본구제, 법인소득세 감면, 중요산업에 대한 면세조치와 정부투자 등을 아울렀다.

○ **이에**: 도쿠가와 시대의 가족형태이다. 장자상속을 엄격하게 지키며, 따라서 농촌에 잉여 인구를 쌓아 도시노동자나 전문직의 인적 원천을 만들어냈다. 1896년 메이지민법은 이에의 형태를 받아들여 호주제를 확립시켰다. 호주제는 1947년 미군정하에서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균분상속제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무라**: 도쿠가와 시대의 농촌 공동체이다. 50호에서 100호 정도의 규모였으며 납세와 행정, 사법 의무를 공동으로 졌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림이 있었으며, 공동의 종교, 금융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메이지정부는 1889년에 무라를 통폐합하여 숫자를 줄였으나 기본 골격을 바꾸지는 않았다. 무라가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하에서 제도적으로 자작농을 지원하면서부터였다.

<<생각해 보기>>

1.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경제 성장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에 대해 비교해 보자.

일본은 대표적인 후발 산업국이며, 동시에 유럽 외에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적 팽창에 나선 국가였다. 2차 대전의 패전 이전까지 일본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국가들에게 근대화의 모범사례로 여겨졌다.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영국과 일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었고, 후발 주자들은 오히려 이런 차이를 성공적인 적응 사례의 특징으로 받아들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경제를 살펴볼 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메이지유신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점, 또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불과 6년만인 1874년 무렵부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의 면에서도 19세기 후반 전 세계 공업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대였던 와중에 일본은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로 먼저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경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스로가 ‘상인화’ 및 ‘생산자화’되었고, 이런 식의 정부주도 경제발전은 이미 도쿠가와시대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은 바쿠후와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전매제를 통해 이미 예전부터 서유럽, 특히 영국의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고,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與民爭利)을 꺼리는 청이나 조선의 유교사상과도 다른 입장에 있었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단기간 내에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통신선 개통, 우편제도 실시, 전화 개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역시 적극 뛰어든 철도의 발달은 수송비용 절감으로 연결돼 섬유공업과 광업발달을 촉진시키는 한편 주식시장을 형성시키고 많은 수의 주식회사를 만들어내 일본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내었다. 이런 점은 독일이나 러시아 등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구한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촌에서 축적된 자본이 지주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과 저가의 곡물이 도시로 공급되었다는 점은 영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로 유입된 노동력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력은 일본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내간 경공업,

그 중에서도 직물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긴 시간 동안 싼 임금으로 노동해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양질의 직물을 제조했던 것이다. 여성 노동력과 경공업 중심의 발전 역시 영국과의 유사점이다. 물론 일본의 직물업은 산업혁명기의 영국 직물업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데다 노동 조직 측면에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2.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가족과 농촌 공동체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도쿠가와시대의 가족형태인 이에제도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차남이하의 자식들은 근대화과정에서 도시노동자로 쉽게 전환되었다. 도시로 나온 사람들은 핵가족을 형성하고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일본사회의 가족형태는 근대적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1896년의 메이지민법은 호주의 여타 가족구성원에 대한 권한을 매우 강조한 호주제를 확립했고, 1947년 미군정하의 민법개정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도쿠가와 시대 이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던 무라(村)는 메이지유신 직전에 7만개정도였으나 1889년 1만 2천개정도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농민의 생활은 여전히 원래 있던 무라 단위로 이뤄졌다. 일본의 농촌을 변화시킨 것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의 농지개혁방침에 따라 대량의 자작농이 탄생하고,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비료, 농약 보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무라의 폐쇄성과 공동체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관개를 위해 여러 무라가 개방적으로 협의해야 했고 기계화가 진전되어 여유시간이 생기자 농민들도 무라 밖에서 검업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났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대화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를 크게 바꿔놓았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의 거대한 굴곡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다.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근대화 이후 한국의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는 대체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길을 따라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경제 공동체로서 대가족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대가족들이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는 집성촌 등 전형적인 농촌 정주 사회였다. 그러나 근대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따라 전개된 근대화는 다수의 농민들을 토지에서 강제로 떼어내 도시빈민, 노동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핵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토지경작을 위해 형성되어 있었던 공동체 역시 해체되었다. 다만 한국의 가족법은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친족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규정을 보존하고 있다. 2005년도의 개정 이전까지는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친족 제도를 규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상당수 제약하던 호주제도가 유지되었던 점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